

공격을 노리는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측사태단계에서 수상의 권한 발동이 가능하고, 수상은 이 단계에서 자위대의 진지구축 등 전투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위대의 실질적 군사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아사히신문, 5.15)

언제, 어디서나, 일본이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면, 실제로 대량파괴무기를 이용 전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군사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5. 유사상정(시뮬레이션)

5.22, 이시야부리 방위청 장관은 명백하게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공격의 의도와 발사준비행위가 명백하면 자위대가 방위 출동할 <무력공격사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발사준비를 판단할 근거나 기준이 애매하고 멋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북한의 미사일기지부대의 통상적 훈련도 '발사준비'로 판단한다면 심각한 주권침해가 될 것이다.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기의 도입 등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상정한 준비조치이다.

일본의 각 신문이 상정한 '유사상황'이다.

(1) 아사히: A국의 핵보유를 둘러싼 경제제재로 일본과 A국의 관계가 악화. A국의 연안에 함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 북핵 문제로 일본이 사실상 경제제재로 들어가면 북일관계가 악화될 것은 뻔하고, 일본이 관계악화를 주도하여 전쟁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연안에 통상훈련을 위해 함대가 집결하는 경우도 '유사상황'으로 담정할 수 있다.

(2) 마이니찌: 일본을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확인된 것. '발사 징후'에 관한 판단도 매우 자의적 주관적으로 될 수 있다.

(3) 요미우리: A국이 탄도미사일 기지의 주변에 부대를 집결,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사일기지 부대의 일상적 훈련도 불온한 움직임으로 본다면 북한군대는 손놓고 아무 것도 하지말라는 의미밖에 안된다.

(4) 산케이: 뽀랑꼬외교를 하고 있던 X국은 '일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선언. 무장공작선이 일본해를 향하고 있다. 북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엄포성 발언을 한 것을 꼬투리 잡을 수 있고, 무장공작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가도 문제이지

만 동해를 향해 떠난 어선을 잘못 판단할 개연성은 충분이 있다. 잘못 판단한 사실에 대해 언론통제해버리면 사실은 영원이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5) 닛케이: 핵무기의 폐기를 거부한 A국은 유엔의 경제제재에 참가한 일본에 탄도미사일발사를 시사했다. '시사'라는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이 일방적이고 주관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 3.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북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연속적으로 벌어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만 확인되었다. 그러나 G-8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생산 수출국에 대해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한 국제적 포위망 구축을 추진하고, EU도 호응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와 함께 북한의 마약 밀매, 달러 위조 등에 대한 단속을 명분으로 북한선적의 공해상 나포 등 일방적 해상봉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전부터 경제제재를 '전쟁선포'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10년 이상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경제는 약간의 제재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만큼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중일은 5차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그 어떤 다자회담도 거부 하고 "자위적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최근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해상봉쇄에 맞먹는 악랄한 적대행위"로, 다자회담을 "고립 압살을 가리는 위장물"로 규정했다. 다자회담이 거부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장성명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지만, 북한은 그 동안 안보리의 어떤 조치도 평화적인 해결노력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엔의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유엔의 승인여부도 무시하고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유엔상정은 군사적 제재를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으로 북한은 보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일공조에 제대로 참

여하지 못한 채 미일공조에 추종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노대통령의 방미 시, 아무런 단서도 붙이지 않고 '추가적 조치'에 합의했고,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더 강경한 조치'에 합의 했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간의 합의를 재확인한 가운데, 일본은 북핵에 대해 대화보다 압력에 무게를 두었으나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자신의 대북강경입장을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구체적 제재조치(만경봉호 입항금지, 조총련의 대북송금 제한 검토 등)의 선봉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제재에 대한 침묵을 북한은 '묵인'으로 간주할 것이 뻔하다. 한미간 공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일련의 압박조치가 긴장고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명시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주권국가로서의 외교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대북 '추가적 조치'를 취할 때는 한미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 외교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추가적 조치'에 대해 요청 받은 적도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추가적 조치'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일공조로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고 국가적 수치감마저 든다. 한국은 우선 미국에게 대북 정책의 목표가 핵 프로그램 폐기인가, 북한 체제붕괴에 있는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자라면 경제제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자라면 북 핵 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며 남북만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뿐이다. 한국이 북 핵 대처에서 유일하게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경제교류협력이다. 따라서 한국은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지를 재천명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자율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북 핵 위기해결에 당사자로서 참가하여 민족의 공생과 동북아평화번영을 주체적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 4.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화운동의 과제

1)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미국과 일본은 대화보다는 경제제재, 봉쇄 등 압박수단을 국제적 공조체제를 정비하면서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압박조치보다는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

일주도의 대북압박조치에 한국이 동조하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국내외 평화세력은 연대의 전열을 강화해야 한다.

2)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경제교류협력이다. 당초 노대통령이 천명한 바와 같이 남북경제교류협력은 한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평화세력은 요구하고 압박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항복하고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미국의 강경파의 논리에 한국이 동조해버린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한국이 북핵문제해결에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국제적 협상을 구경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의 주체적 역량을 최소한 발휘하기 위해서도 경험과 핵문제는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

3) 북한과 우방국이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2002년 9월 고이즈미총리가 평양방문 시 선언한 것을 실행하도록 일본의 평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5)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배치전환계획을 받아들이고 전시작전통수권을 한국에 이양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6) 이번 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구체적 실천을 해야 한다.

7) 전 세계의 반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반전평화세계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운동에 대한 일본의 과제

키타가와 히로카즈 일한민중연대

일조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국내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중이 한반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 17일, 일 조 정상회담과 일 조 평양선언은 일 조 국교정상화의 조 기 실현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시에 밝힌 일본인 납치와 관련된 사실에 의해서 일본 국내는 "북한 후려치기"에 폭풍에 휩싸여 일 조 국교 정상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필두로 해외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일본이 10여명의 납치사건에 의해서 왜? 분노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 북한 후려치기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째는 권력층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민중의 마음에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 민족배외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셋째, 매스미디어가 권력의 의도와 민중의 배외의식을 결합시켜 이를 표면화시킨 작용을 한 것입니다. 권력과 돈에 좌우되는 매스미디어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악의에 찬 보도를 반복함으로써 민중의 조선배외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족배외의식에 기초하여 일본인 전체가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 의식이 국내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 제일조선인에 대한 폭행, 폭언사건이 빈발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쨌든 범인이 일본인이었음은 틀림없

는 일이며, 그 범인이 한사람도 체포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 일본의 이상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자민당의 증진인 아소우, 에토우 두 국회의원이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망언은 조선민족 7천만 전체에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일본국내에 북한 후려치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망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사람은 어떠한 처분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격의 대상은 명백하게 북한을 향해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북 포위망을 좁혀가려는 망언이었던 것입니다.

북한 후려치기가 전 사회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추수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되는 것에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사람들의 운동은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납치사건보다도 국교정상화를 중시한다'고 발언했던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전전의 군국주의에 반대하여 싸웠던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국민"이라는 호칭이 덮어씌워졌습니다. 그것은 일본 국내가 이미 준전시 체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시정권이 이라크에 대한 침공작전을 개시하려고 할 때 일본 국내에서도 반전평화운동이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다'는 부시의 발언을 접하면서 '이라크 전쟁 반대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에는 '이라크와 한반도에 평화를! 부시 고이즈미의 전쟁정책을 반대한다! 일 한연대 액션'을 동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집회에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정대연씨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똑같이 동경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 압살사건의 일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반전액션'에 이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인 김성란씨를 초청하여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참가자가 별로 많이 않았던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후려치기의 엄혹성을 몸으로 느끼는 우리들에게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준 집회였고 데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반전평화운동의 커다란 목표는 권력층이 추진하는 일본 독자의 전쟁법인 유사관련 3법안의 성립을 저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반대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법안은 6월 6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어 버렸습니다. 북한 후려치기가 휩쓰는 중에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위대, 즉 군대를 받아들이는 쪽의 입

장에서 보면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를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90년대 말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 소동을 야기한 것으로 주변 사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인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변사태법과 국내유사법의 발동을 막아내는 투쟁을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권력의 의도, 권력의 의도에 따르는 보도,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중의 의식이라는 삼위일체의 북한 후려치기를 깨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민중의 조선차별의식은 명치정부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는 과정에서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전후에 식민지 지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보상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민중들의 마음에 차별의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던 것입니다. 조선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 동시에 일 한 조약의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 없이는 조선차별의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파고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정부는 가을의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선동해온 북한 후려치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치적 의도인 유사법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반도를 다시 전장으로 만들지 말라', '정부는 부시의 전쟁 정책에 가담하지 말라'는 호소가 북한 후려치기의 태풍앞에서 소실되어 버리지 않고 광범한 민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1일 아사히 신문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 조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와 40%대로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9 17 정상회담 직후는 '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가 70%가까이 되었습니다. 대폭적인 감소는 매스미디어의 북한 후려치기의 성과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역시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반수 가까이 있습니다. 그 반수의 사람들이 '일 조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실제로 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교정상화는 이윽고 실현을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호소해 온 대상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지속해온 호소가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강하게 추진해온 일 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동시에 한 일 조약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일

거에 커다랗게 확산시켜 갈 것입니다.

일 조 국교정상화의 실현과 한 일조약의 수정이야말로 일본이 한반도평화에 공헌하는 첫번째 길입니다. 일 조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은 북한을 적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반도에 미국에 추수하여 자위대를 파견하려하는 야망을 억지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 조 국교는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합니다.

## 전쟁위기의 연속인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보장체제로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 III. 탈냉전기의 연속적인 한반도전쟁위기
- IV. 현존 안보체제의 反평화성과 자살체제적 성격
- V. 한반도평화보장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VI. 현존 한반도 평화통일정세
- VII.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제
- VIII. 맺음말

### I. 머리말

올해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정전협정이<sup>1)</sup> 체결 된지 50주년을 맞았다. 정전협정은 그 전문에서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로 명시하듯이 전투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는 평화의 정착은 아니었다.<sup>2)</sup>

1) 일반적으로 휴전(armistice)은 적대행위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의미하고 정전(truce)은 국제연합 등 국제관계기관의 알선, 중재, 보증 등이 전제된다. 7.27협정은 정전이 알맞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미국과 남한은 의도적으로 휴전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북한은 정전을 선호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삼 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Korea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K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1954년에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미국이 이를 고의적으로 사보따취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은 오늘까지 지연된 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이다. 입으로만 한반도평화를 주장하는 미국은 북한이 연례행사로 촉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이제까지 일축해 왔다. 더 나아가 2002년 가을부터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전쟁위기에 즈음하여 북한이 평화협정보다 간이한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단호히 거절한 채 한 발 한 발 전쟁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또 2조 13항은 “ㄷ. Korea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ㄹ. Korea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가열 차게 진행해 왔고, 미국은 핵무기까지 반입했고, 부시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군비경쟁을 가속화하여 자주국방이라는 빌미로 군사력증강을 기하급수적으로 꾀하고, 주한미군은 첨단 최 신예무기를 끌어들여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또 2조 15항은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2) 본래 북조선과 중국은 정전회담이 한반도의 통일, 외국군 철수, 평화실현 등 정치·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곧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과 같은 협정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철저히 군사적 성격에 국한시키는 것을, 곧 전쟁상태는 지속되면서 단순한 무력적대행위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휴전을 고집하였다. 북조선과 중국의 주장은 한국전쟁의 근본적 원인인 분단과 외세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통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보장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쟁재발을 방지하려는 장기적인 전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단지 제4조 60항에 정치회담 건의만 명시함으로써 평화협정 등에 관한 문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바로 정전협정 당일 미국은 ‘코리아정전에 관한 16개국의 공동정책 선언’에서, “우리들은 국제연합의 원칙에 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다시 단결하여 조속히 이에 대항할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러한 정전협정의 위반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전투행위를 한반도에 국한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적인 선언을 덧붙였다. 또한 한 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1954년 5월에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등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미국측의 일방적 철수 선포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써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전투행위의 일시적인 중지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협정에 불과하게 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언제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는 전투상태는 중지되었지만 전쟁상태는 중지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여기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Korea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 이 지역을 무단점거하고는 두 번에 걸친 서해교전이라는 전면전의 위기를 자아내는 기본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위기의 연속인 정전체제를 극복하여 평화보장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민족이 죽고 사는 생명권 자체를 위협하는 전쟁위기 현황을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대별하여 고찰하겠다. 특히 탈냉전기를 맞아 남한이 추구하는 미국 의존의 안보체제가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커녕 오히려 생명권을 박탈하는 주범의 역할을 하는 자살체제임을 밝혀 내겠다. 둘째, 이러한 자살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 셋째, 현재 한반도에 엄습하고 있는 전쟁위기의 극복과 장기적 평화보장체제를 위한 장단기적 과제를 모색해 보겠다.

## II. 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영국 사학자 할리데이(Jon Halliday)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역설했다. 이미 미군상륙 이틀 전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창건된 국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강제적으로 무너뜨리고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귀국한 상해임시정부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조선인에 의한 조선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미국은 우리 현대사를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전쟁의 첫 출발로 장식하면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역사인식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미국이 우리 현대사에 개입한 이래 한반도는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비극적 전쟁을 치르고 또 오늘날까지 전쟁의 위협 아래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1945년 11월 중순 남원에서 저지른 미군의 직접적인 학살사건을 필두로 미군정 3년동안 폭력과 저항의 연속으로 평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sup>3)</sup> 1948년 2월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운다는 미국의 방침이 유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노골화되면서 민

3)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와 폭력적인 탄압 및 만행에 관하여는 오연호, 식민지 아들에게 (서울: 백산서당, 1990).

중세력은 2.7구국투쟁을 선포하여 미국의 단독정부수립 계획을 무력으로 저지시킨다는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전쟁의 서막인 ‘작은전쟁’이 시작되고 1950년 6월 25일을 시발로 확대전쟁으로 이어질 때까지 무려 1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는 1945년 9월 미군이 이 땅에 상륙하면서부터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줄곧 평화상태가 아닌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무려 5-6백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적 손실을 입는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참사였다. 이 기간동안 저질러진 살육행위는 이 땅에서 평화체제의 정착이 얼마나 긴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외세와 남한 및 북조선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군비경쟁을 일삼고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면서 언제나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화급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재연하였다. 곧, 민족생존권이 지속적인 위기 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반도의 전쟁 재발은 바로 핵전쟁을 의미하고 이는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냉전기의 전쟁위기를 점검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미군이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위기에 처하자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무려 26개의 핵무기를 만주와 압록강주변에 집중 투하하여 북조선 북부지역과 만주지역을 죽음의 계곡으로 만들겠다고면서 이 작전의 승인을 미군 수뇌부에 요청했다. 트루만행정부는 원자탄 투하를 적극 고려하여 세계를 경악케 하였으며 이에 영국 등 유럽이 강력히 항의해 이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 정전 시점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투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는 허드슨작전(Hudson Harbor Exercise)이란 모의 핵투하연습을 북조선 상공에서 감행했다.<sup>4)</sup> 우리는 남한군이나 미군이 북조선에 원자탄을 투하하니까 죽지 않으려면 월남하라는 권유에 따라 많은 북조선주민이 월남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원자탄 투하 위협이 미국의 월남인 양산을 위한 단순한 선동 차원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작전계획과 직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정전 이후 1957년 미국은 무장증강을 금지하는 휴전협정 13항 2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여 남한에 핵무기 배치 의도를 드러내고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시발시켰

4) 이에 관해서는 피터 헤이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핵 딜레마, 한울, 1993, 제1장 ‘역사의 교훈’을 참조 바란다.

다. 이에 북조선은 1957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1차회의에서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천명하고 핵무기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궤기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애초 계획대로 1958년 초 핵폭탄, 어네스트 존 미사일, 펜텀기 편대 등을 남한에 배치하였다.

이후 1991년 9월 부시미국대통령이 전술핵무기 철거를 선언하기까지 무려 1300기에 이르는 핵무기가 북조선과 소련을 겨냥하여 남한에 포진해 있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1958년 당시 남한에서 미국이 핵무기 등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조선은 중국군을 모두 철군시켰다는 점이다. 그 이후 북조선은 외국군을 더 이상 북조선에 주둔시키지 않았다. 물론 핵무기가 북조선 땅에 발붙인 적이라곤 한번도 없었다.

남한에 1300여기의 핵무기가 배치된 핵전쟁 위협상황에서 핵전쟁 위기로 치달은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1968년 미국의 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북조선 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을 경우와 1969년 미국의 스파이비행기인 EC-121정찰기 격추사건 및 1976년 도끼사건의 경우 등은 핵전쟁의 전운이 감돌아 민족생존권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sup>5)</sup> 특히 도끼사건의 경우 괌도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B-52폭격기가 비무장지대로 비행하다 마지막 순간에 기수를 돌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피터 헤이즈, 1993).

월남전이 종식되는 1970년대 중반 미국은 슬레진저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과 주한미군은 북조선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1975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1976년부터 거의 해마다 세계에서 최대규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한미합동으로 실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1983년 레이건 재임 시 만약 중동지역에서 미·소간의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소련군사력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기 위해 남한과 일본이 북조선에 대해 지상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는 충격적인 '와인버거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

팀스피리트훈련은 1983년을 기해 질적 전환을 한다. 곧, 1982년에 계획되고 1983년 팀훈련에서 성공적으로 연습된 OPLAN 5027이라는 새로운 작전을 채택한 것이다. 5027은 휴전선을 회복한다는 적극적 방어전이라는 옛 전략에서 북조선정권 붕괴라는 적극적인 공세전으로 전환된 것이다. 곧, 남과 북이 무력 충돌할 경

5) EC-121기와 같은 미국의 스파이정찰기는 U-2기를 비롯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정탐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폭로는 미국이 1950-70년사이 북한 고공을 20,000회 정찰하여 200여명의 조종사가 실종되었고, 그들 조종사 가족에 사망경위등을 알리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한국일보 1993년 5월4일

우 휴전선 근처에서 며칠 간의 혼전을 거쳐 평양의 중심부를 공격하여 북조선정권을 멸망시킨다는 통일전쟁을 의미한다. 이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소강전 등을 통해 전쟁확대를 막고 휴전을 피하는 전략이 아니라 북조선정권의 몰락까지 전쟁을 끌고 가는 섬멸전을 의미한다. 지난번 서울불바다 파문 이후 이병태 국방장관이 언급한 통일전쟁은 바로 5027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새로운 한미연합사 작전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껴 사상최초로 원산 만에서 소련과 대규모 해군훈련을 실시하고, 평양과 원산에 주둔하고 있는 타격부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남과 북,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소련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격추되는 불상사를 맞게 된다.

이러한 미국주도의 전쟁위기와 더불어 북한측 역시 전쟁위기를 주도했다. 베트남전쟁에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68년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투입사건 등은 비록 전면전을 상정했는지 아닌지는 불투명하더라도 전면전 위기로 치닫게 한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이었다.

### III. 탈냉전기의 연속적인 한반도전쟁위기

1989년 탈냉전이 이루어져 지구촌은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서냉전에 의해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강요당했던 이 곳 한반도에서도 응당 탈냉전의 역사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점에서 한반도 속의 미국은 오히려 더 사악한 냉전전사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 전쟁 위기는 오히려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 직후 기고만장한 미국은 당시의 과월 합참의장의 "이제 다음 차례는 김일성과 카스트로이다"라는 말처럼 120일전투시나리오를 등으로 전쟁위협을 자행한(강정구, 1991) 이후 지금까지 한미군사동맹의 주역인 미국에 의해 전쟁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1994년 6월 영변핵위기로 인한 전쟁일보 직전까지의 아슬아슬한 순간, 98년 금창리핵위기 조장사건, 99년의 미사일 위기사건, 2002년 '악의 축' 전쟁위협과 2003년 현금의 전쟁위기, 또 2차에 걸친 서해교전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고 살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한사람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권이 거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에 달려 있고 이에 관한 정보가 우리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차단되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24일 한겨레 신문과의 대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전쟁 일보 직전 상황에 대한 회고에서 "하루는 보고를 받으니 내일... 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전쟁 직전에 취하는 조처다... 남북에서... 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그 날 저녁 클린턴하고 32분 동안 통화했는데 대판 싸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전쟁에서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라는 것과, 또 전쟁국면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의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믿고 의존하던 '동맹국'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 이 당시 미국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전쟁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2001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 미군, 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주한미군을 수 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중앙일보 2001/06/17).

이같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체, 전쟁위기에 따른 이해관계, 전쟁위기의 요인 등이 우리 민족과 무관하게 외세인 미국에 의해 조성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띠는 기막힌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군사동맹이 굳건히 지속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환상에 젖어 있다. 이제 이러한 환상에서 깨어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의 주역인 미국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인 전쟁위기였던 93-94년의 영변핵위기와 98-99년의 금창리 핵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93-94년 영변 핵위기<sup>6)</sup>

1993년 3월부터 시작된 영변 핵위기는 94년 10월 21일 조미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군사적 긴장을 가졌고, 그 가운데 94년 6월의 긴장은 우리의 민족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모는 최악의 전쟁위기였다. 이미 미국은 6월 2일부터 매시간 단위로 한반도상황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환태평양군사훈련에 참가시켰으며, 미 상원은 이미 퇴역한 고속정찰기 SR71을 복귀시켜 북한상공을 정기정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예방폭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군 1개사단 증파를 협의하는 등 군사적 대결상태를 준비해 나갔다. 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북한이 계속 버틸 경우에 대비해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언론이나 여론조사 등도 대화보다는 대결을 촉구하고 군사력 사용이라는 초강경대결을 역설하였다(한겨레신문 1994. 6. 7).

최종의 순간은 94년 6월 16일이었다. 한국에서는 렉 주한미사령관과 레이니 대사가 미대사관에서 몰래 만나서, 비상체제를 가동, 소개작전을 추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레이니는 공식명령도 기다리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딸과 세 손자 손녀에게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한 것이다. 워싱턴시각으로 16일 아침 10시경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 국방 장관, 합참의장, CIA국장, 유엔대사, 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서두에 클린턴은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추진을 최종 승인했다. 클린턴의 최종승인이 떨어지자 [합참의장은] 한반도 주변지역의 미군증강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점진적 증강 안이 담긴 제1안에 대해 설명한 뒤 전투기와 또 다른 항모전단 그리고 1만 명을 웃도는 추가병력 배치에 관한 제2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Oberdorfer 1998, 300~303)

이미 북한은 미군의 추가배치가 있을 경우 이를 군사공격으로 간주하고 선제공격을 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때, 이 긴박한 순간에 백악관은 평양을 방문중인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이로써 민족과멸을 초래할 전쟁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게 되었다. 실로 모퉁이 송연한 순간이었다. 물론 미국은

6) (강정구, 1994)에 주로 의존했다.



5월 18일 국방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러, 현역 4성장군과 제독, 세계 전역에 파견된 장성 등을 대거 소집하여 특별군사회의를 거쳐 도상훈련이 아니라 '실전회의'를 통하여 만반의 준비를 거친 상태였다(Oberdorfer 1998, 291). 이때 제3안은 전면전, 곧 작전계획 5027에 의한 북한섬멸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40만 명 이상의 미군과병을 전제로 예비군 소집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Oberdorfer 1998, 299).

전쟁정보국가정보 담당관 찰스 앨런은 미군의 무력증강은 북한의 전시 동원령을 유발시킴으로써 선제공격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대통령에 대한 전쟁정보보고는 전쟁개시가 임박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Sigal 1998, 208). 다행히 20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에서 페리(Perry)가 밝힌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김일성과 카터의 합의를 받아들여 파국을 모면하게 되었다.

남한정부 또한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통령은 “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 한 미 양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100% 장악하고 있다. ...한 미 양국은 만일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한겨레신문 1994. 6. 4)면서 '여유'의 수준을 넘어서 '전쟁승리'를 자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중앙일보 1994. 6. 4). 6월 8일 김영삼정권은 출범 이후 첫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예비군 동원태세, 국지전 대비태세, 심지어 전면전까지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재는 곧 전쟁이며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다. ...동족에 대한 제재 판을 벌여놓고도 자기만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대응하는(중앙일보 1994. 6. 6) 한편, 군 참모총장 최광을 중국에 급파하여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불사를 선언하였다.

1년 8개월 동안 긴박한 공방과 다섯 차례의 군사적 긴장을 겪은 끝에 마침내, '합의문 발표 후 1개월 이내 북핵 핵활동 동결' '북한의 NPT잔류와 국제원자력기구 임시 일반 핵사찰 수용' '대북 핵 불사용에 대한 미국무부 보장' '2천MW 경수로 제공에 대해 6개월 재 계약 및 2003년 완공' '핵동결 뒤 연락사무소 연내 설치' '연간 중유 50만 톤까지의 대체에너지를 북한에 공급' 경제제재 해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10 21북미제네바협정이 타결되었다. 이리하여 북미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의 단계로 전환하고 휴전협정 또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북한의 생존권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국제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0 21조미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

다. 공화당의 공격에 클린턴 정부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붕괴할 것이 거의 틀림없으며, 그때가 되면 북한은 이미 남한에 흡수돼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Harrison, 2003, 44-45). 또 금창리핵위기를 계기로 BDU-38의 모의핵폭탄으로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실전연습을 마무리 해 새로운 작전계획 5027-98로 북한을 섬멸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10 21협정이 규정한 핵연료봉을 97%까지 봉인하고 핵발전소를 중단하여 협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사항인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3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2천MW의 경수로도 적기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8~9년까지 제대로 이행될지도 의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전혀 진전시키지 않았다. 또 중유 50만 톤을 적기에 제대로 공급하지도 않았다.

협정을 거의 100% 이행한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경고도 했고, 4년 동안 유보했던 미사일실험을 재개해 이를 알렸다(Harrison, 2003, 35-36). 그러나 부시미국은 적반하장 격으로 '악의 축'으로 전쟁위협을 자행했고 연속해서 2002년 10월 북핵문제를 일으켜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다시 불러드리고 있다.

### 98년 금창리 핵위기

금창리 핵위기는 셸리그 해리슨이나 퀴노네스가 밝힌 것처럼 의회의 강경파, 국방부와 CIA의 매파 등이 미 국방정보국(DIA) 패트릭 휴즈 국장(현역중장)이 유출한 인공위성 사진에 북한이 금창리에 핵무기개발을 한다는 엉터리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서 발단되었다(중앙일보 1998. 11. 24). 페리 북한정책조정관의 전략안 시안에서는 한반도를 전쟁상황으로 몰아넣는 3단계 안을 예고했으며, 미 합참 간부회의에서 존 킬러리 주한미사령관은 “올 봄 한국에서 일종의 '긴급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99년 2월 2일 조지 테넷 CIA 국장은 상원 군사위에서 “북한이 절박한 경제상황으로 '미국과 위험한 극한정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한겨레 1999. 2. 4). 98년 10월 9일 주한미군 작전부참모장인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은 북한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는 작전계획 5027-98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모두 죽여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전쟁위기를 확산시켰다(Halloran, 1998). 또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밀착한 공화당의원들은 북한에 제공해야 할 98년도 분 중유 50만 톤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협정이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98년 8월부터 본격화된 금창리 핵위기는 8월 말 북한이 유보했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로 더욱 증폭되어 '한반도 봄 위기설'로 발화되면서 지난 1993~94년의 위기를 재현하는 듯했다. 그러나 94년 전쟁위기 때 전쟁을 부추겨 민족안보를 저버린 김영삼 정부와는 달리 김대중 정권은 포용정책의 테두리 속으로 금창리핵위기를 끌어들이 위기를 잠재워 민족안보를 지키는 전향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대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금창리 전쟁위기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라는 외세가 인공위성 사진 등에서 이상징후만 나타나면, 비록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그것을 곧바로 핵개발로 단정지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몰고 온다는 사실에 있다. 인공위성 사진에 나타난 뭔가 이상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밟지 않고, '북한은 으레 그럴 테니까'라는 근거 없는 낙인론에 매몰되어 바로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무조건 단정지으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재연시킨 것이다. 1년 반 이상의 협상과 진통 끝에 베를린합의에 이르러 미국은 북한에 60만 톤의 식량지원을 하고 금창리를 '사찰'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개발에 대한 아무런 징후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무언가 의심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경각에 달린다는 기막힌 현실을 말한다.

#### 탈냉전기 한반도전쟁위기의 일반적 속성

이제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일반적 속성을 요약하면

첫째, 냉전시대보다 탈냉전시대에 전쟁위기의 빈도수와 위협강도가 더 높다. 이는 소련의 몰락으로 대미 견제력이 상실되어 전쟁억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탈냉전시대 한반도전쟁위기는 북한전쟁위협론이 아니라 미국전쟁위협론에서 비롯된다.

셋째, 전쟁위기가 94년 6월 같이 전쟁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도 전쟁을 막지 못하게 된다.

넷째, 한국이 모르는 사이 미국은 전쟁비밀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선제 공격을 강조한 부시독트린에 따른 2002년 관 작전계획 5027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sup>7)</sup>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통제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주류정치세력과 주류언론 등 주류는 전쟁위기에 직면하여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무조건 미국에 동조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막기보다 전쟁부추기는 역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여섯째, 국민일반들은 대부분 전쟁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98년 이후 14년동안 8차례 전쟁위기. 6번 의도적.계획적: 93.**

#### IV. 현존 안보체제의 反평화성과 자살체제적 성격

위의 한반도 전쟁위기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가 발생했다. 이라크전쟁이후 한반도 전쟁위기가 전 세계적 우려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선호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또 4월 22일 자 <더 오스트레일리안>신문은 북한폭격 정밀계획에는 휴전선 일대의 북한진지까지 폭격하는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음을 폭로했고, 호주 외무장관이 이를 확인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올해 전쟁발발을 경고(와싱턴 포스트 03.7.15)하면서 "우리(미국)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부시 행정부와 남한 그리고 중국과 고위관리들과 최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달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의회조사국 래리 너시 연구원 "부시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숙고한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7월17일 기고)라는 글에서 북한정권교체는 부시정부의 정책목표이며 "미국의 군사계획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적 공격에서부터 다수의 공격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타격계획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7-10월은 한반도 내부의 주변에서 위험한 시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전쟁위기는 서서히 차곡차곡 진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전쟁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미 2사단의 평택이남 이

7)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http://www.globalsecurity.org))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 미 양국의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수록된 내용임

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이전시기도 올해 안으로 제시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루기로 했지만 미국 측의 소식통은 여전히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전 미 지상군의 남쪽 이동은 인계철선을 회피하게 하여 미국의 북한 무력공격에 용이한 조건 만들기라는 것을 미국고위관료들은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sup>8)</sup> 또 지난 2월 이후 한반도주변에는 B24 전폭기 24대가 증편되었고, 3월에는 통합훈련에 동원된 가공스런 F-117 스텔스폭격기, F-15E 비행대대 등이 군사훈련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철수하고 있지 않다. 3차 회담 등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고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회담이 단지 무력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 명분 쌓기, 압력 수단의 형식으로만 활용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켈리 찬관보가 그에게 공개적으로 "후세인 동상이 무너진 것처럼 김일성 동상도 그렇게 될 것"이라 표명했으며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은 '악의 축'인 김정일 정권을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며 "(노무현 정부가 경제봉쇄에 반대한다면) 주한미군이 다 철수하고 한국은 국제미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레시안>03.5.21).

미 국방부는 '북폭'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극비리에 북한지질 자료를 수집했다(교도통신 2003-05-20). 교도통신은 2002년 연말과 2003년 연초에 "이들은 일본에서는 국립 공문서 도서관 등에서 일제시절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했던 광물탐사 자료까지 샅샅이 훑었고, 한국에서도 국방부 등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주둔 병력을 한반도에 신속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 해병 신속기동군 500여명을 고속정으로 22시간 내 경북 포항에 도착시켰다. 이는 미 제3해병원정대 '신속대응군' 한반도 해상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전쟁준비는 다방면에서 면밀하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해안봉쇄 계획입안(NYT, 2003.5.23), 48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연말까지 최신형인 PAC-3로 교체, 오산에 스텔스 폭격기용으로 1개의 활주로 긴급 추가건설, 주한 미 7공군이 보유중인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을 전천후 폭격이 가능한 정밀 유도방식의 통합직격탄(JDAM)으로 개량, '압록강'으로 이름 붙인 북한인근 대규모 한미합동상륙훈련 실시,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 투입하여 150가지 전력증강, 한국국방비 5조 이상

8) Official Says U.S. Will Reposition Its Troops in South Korea" By HOWARD W. FRENCH(NYT 2003 06 03)

인상 등이다.

북한이 제안한 포괄적 해결방안인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거절하고 이제 남한까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해결에 동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한반도는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sup>9)</sup>

지금 한반도에 엄습하고 있는 연속적인 전쟁의 먹구름은 평화문제의 긴급함을 웅변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인 해결책 못지 않게 장기적 평화보장체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여겨 필자는 한미군사동맹에 의존하는 남한의 안보체제가 안보는커녕 바로 자살체제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안보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

남한은 이제까지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심지어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서 동북아세력균형의 역할을 해야만 통일한국의 안보도 보장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역설해 왔다.<sup>10)</sup> 이 점에서는 미국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sup>11)</sup>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탈냉전을,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미국의 패권주의는 전쟁 의존적인 신파권주의로 변화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일방적 대미의존 안보패러다임은 전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및 통일을 가져 올 수 없다. 오히려 이 대미의존 안보패러다임은 안보보다는 한반도전쟁위기관 조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개개인과 민족전체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다(이철기, 2003). 따라서 우리들의 기본권의 기본권인 생명

9) 6월13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 미 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는 한국이 미 일과 손잡고 북한의 마약 거래와 위조 지폐 발행을 단속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봉쇄전략의 1단계 조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이 단호히 거절하고 노무현 당선자도 지지했던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한 반대 노선에서 이탈했음을 말해 준다.

10) 여기서 안보는 군사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부문을 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라기보다 전통적 개념인 '군사적 위협의 부재'를 의미한다. 또 안보체제 또는 안보레짐이란 군사적 위협의 부재를 위해 국가들의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간에 맺어진 일련의 지속적 협정을 의미한다.

11) 후보 노무현은 미국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자주적 지향을 가졌으나 이라크파병이나 주한미군 등의 언급이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 노무현은 이 자주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지나 행위선택이 구조적 제약 속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 준 사례이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은 광화문 촛불시위와 같은 남한 시민사회의 역동성, 동북아협력체 출범 등의 조건으로 이완되고 있어 점차 남한정부의 행위선택지평은 넓어질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평화번영국가의 추진이 주어진 구조적 이완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구조적 제약을 약화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노무현의 행보는 '자발적 노예주의'성을 노정하고 있어 구조적 제약을 뛰어 넘는 정책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현존의 대미 의존적인 안보패러다임의 폐기와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한반도평화보장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 1. 북한전쟁위협론의 허구성과 미국전쟁위협론의 진실성

현존 안보체제는 북한전쟁위협론에 근거하고 있으나 탈냉전 이후 이는 허구에 불과하고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이다. 이를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에 의해 밝혀 보겠다. 왜냐하면 북한전쟁위협론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허구적인 맹목적 냉전신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탈냉전과 평화의 시대라는 90년 대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자.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테베작전' 언급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다 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창리핵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미사일위기,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 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전쟁위협(임동원, 2002), 2002년 2차 서해교전(강정구, 2002b), 또 2003년 현존의 한반도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 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안보(평화)파괴 또는 전쟁위기 주도 확률은 6/8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쟁위기 주도 확률은 각기 1/8로서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은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오히려 한반도전쟁위기(안보파괴)를 불러오는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곧 주한미군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미국이 전쟁주범임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두 번에 걸친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사건으로 의도했거나 계획적인 전쟁위기는 아니었다.<sup>12)</sup>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전쟁위기는 모두 계획적

12) 국방부는 7월 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군의 악의적인 선제 기습"이라고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일보가(2003년 5월28일) 확인한 것은 "합참의 서해교전을 분석한 A4용지 3쪽짜리 2급비밀문건에 따르면, 한국 및 한미연합사 정보 관계자는 교전 다음 날인 6월30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서해교전을 북한의 계획된, 의도적 공격이라기보다는 상

이었고 의도적이었다. 계획적 전쟁주도에 의한 전쟁위기 횡수는 여섯 번이었고 이를 모두 미국이 주도했다. 그러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쟁주도는 미국이 100%를 차지한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의 주범은 미국이라는 논거가 더욱 확실해진다.

둘째, 북한전쟁위협론이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이 진실이란 것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미간의 공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요구인 불가침조약마저도 계속 거절하고 있으며 핵태세보고서(NPR), '악의 축', 부시독트린, 작전계획 5027-02 등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평화를 말로만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미 미일 한일 간의 군사훈련을 더 강화해 왔다. 3월 19일부터 대북한침공 실전연습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통합훈련((RSOI+ Foal Eagle)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25만에 가까운 20만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됐다. 또 김정일 정권의 전복, 북한군 궤멸,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훈련되는 것으로 93년 팀스리트훈련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동원되는 F-117 스텔스 전폭기로 정밀타격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전쟁공포감을 더욱 불러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24대의 B-1, B-52 전략폭격기를 꺾에 보냈고, 군사훈련을 위해 한국에 배치했던 F-117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Johnson, 2003).

호 근접해 기동하다 발생한 99년 연평해전과 유사하게 아군 고속정이 충돌공격을 감행하려 한 데 대해 위협을 느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다. "이 문건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 북한 경비정과 황해도 사곳에 위치한 북한 해군 8전대사령부간, 또 정박 중인 북한 대기함과 북한 지휘부의 통신 내용 등 중요 첩보(SI)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해군 2함대의 묵인 하에 어로저지선 밖으로까지 진출해 꽃게잡이 조업을 한 우리 어선들의 움직임이 교전을 유발한 한 원인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당시 북의 우발적 공격에 대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햇볕정책으로 대북경계태세가 이완돼 있던 탓에 패전했을 것이라는 야당 등의 공세를 우려한 청와대의 판단과 패전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작전지휘라인간의 이해가 맞물려 사태를 왜곡한 것이고 교전 이후 북한 해군사령부가 8전대에 현지 감찰을 나와 교전을 막지 못한 북한 등산곶 경비정 함장 등 지휘관을 줄줄이 문책한 사실도 우발적 사태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 통합훈련은, 1976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면서 대북핵공격훈련이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이 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 의해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북미제네바합의 위배이다. 주목할 사실은 팀스피리트훈련도 통합훈련도 모두 현 미국방장관인 전쟁광 럼스펠드가 주도한 것이다.

넷째, 다음에 확인하겠지만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이다(문화방송, 2003).

다섯째,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고조되어 남북 간의 군사긴장은 저하되어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최근 한반도 전쟁위협은 북한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동맹이라는 미국, 그 물적토대인 주한미군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곧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은 진실인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허구적인 '북한겨냥 미국의존 안보체제'에 매몰되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미국겨냥 민족 동북아의존 민족안보체제'를 방기한 채 오히려 대미의존 안보에 빠져 연속적인 전쟁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이철기, 2003).

이러한 대미의존 안보체제의 당사자인 미국이 바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인 것이 확인 된 이상 현재의 미국의존 안보체제는 바로 자살체제임이 명백하다. 현 안보체제는 마치 도둑에게 공간 열쇠를 맡기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렇다면 현존안보체제와 그의 토대인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폐기시키고 우리와 민족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군사체계적으로 MD체제 등에 의해 완전히 예속될 신한미군사동맹체제를 추진하고 있어 자살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어불성설의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 2. 남한군열세론의 맹목성과 북한군열세론의 과학성

현존 미국의존 안보체제는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대북한 전쟁억제력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이들에 안보를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남한군열세론은 허구이고, 전쟁억제력은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한군사력이 북한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 점, 곧 북한군열세론을 몇 가지 논거로 밝히겠다.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177억 달러이고 같은 해 남한의 군사비는 170억 달러였다. 또 99년의 북한예산은 94억 달러에 불과하고 GNP 또한 겨우 160억 달러이다. 예산의 30%를 군사비로 쓴다 하더라도 북한군사비는 28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기관 등은 대략 10억~20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2000년 국방백서요약은 북한이 자국의 군사비를 13.6억 달러로 밝히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 백서는 "북한의 2000년도 군사비규모는 국가 총예산(95억 달러)의 14.5% 수준인 13.6억 달러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구매력을 우리 군과 비교 시 무기체계와 운영유지비가 저렴하여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 증강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군사비는 28.5억 달러이고 무기체계와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구식무기가 대부분이어서 북한이 현대전의 공대지 군사전략에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스톡홀름의 평화연구소는 남한의 군사비를 151억 달러로 추정하고, 1995~99년 외국무기 구입비가 남한은 60억 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1.9억 달러에 불과하고, 2000년에는 남한은 북한 총군사비보다 많은 23억 달러를 외국무기 구입에 투입해 세계 3위의 무기수입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SIPRI Yearbook 2000#, 2001, pp. 414~15). 이 같은 군사비 격차는 한두 해가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사력의 열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열세는 남한군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99년 육군본부가 만든 '정훈교재'에서는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동아일보 1999. 4. 25). 그 첫째와 셋째만 들면, 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상태이며 체격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국군은 평균신장 171cm에 체중 66kg, 북한군은 162cm에 47~49kg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또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2003년 3월 6일 국방부에서 군부 인사들과의 정례 회동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병력을 매우 앞쪽에 배치해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북한의 25~35배에 이른다. 필요한 만큼의 역지력을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있다 (<한겨레> 03.3.16)고 밝혔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전문가인 보수성향의 래리 너시(Larry Liksch)는 지난 2000년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 과 가진 대담에서, "지난 5년 간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대북한 전쟁억제력은 주한미군이 없이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남한의 흡수통일기도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Harrison, 2003, 28-31). 1996년 봄 당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북한은 평화유지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이 있으며, 또 조선민족문제연구회 회장인 박성덕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자로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종혁 부위원장의 말을 재확인했다.

### 3. 동북아세력균형으로서의 주한미군 불가피론의 전쟁 유발성

우리 사회의 주류들 대부분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통한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미국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미 영동맹 수준으로의 미일동맹 격상,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유사입법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 MD를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구소련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완전 제압 및 봉쇄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 동북아 패권전략의 튼튼한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는 2020~30년경에는 신냉전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중국 중심의 반패권연대가 성립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바로 이러한 신냉전의 물적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 역할을 해 동북아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동북아 대립구도를 보자. 느슨한 연대의 틀은 한 미일 대만과 북중 러이다. 전자의 경우 군사비만 보더라도 미국-3,790억 달러(2003년 기준) 일본-450억 한국-150억, 대만 100억으로 총계는 무려 4,500억 달러 수준이다. 후자의 경우 북한 13.6-28억, 중국 250억 러시아 200억 수준으로 총계 500억 달러로 추정

되고 있다. 물론 2002년 7월에 나온 부시행정부의 ‘중국군사력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비를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총액을 200억 달러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실제 군사예산이 65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2020년께는 지금의 3-4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sup>13)</sup> 그러나 미 의회 자문기구이자 외교정책싱크탱크인 대외관계협의회(CFR)은 2003년 5월 22일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20년 뒤져있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북아세력균형은 그야말로 미국이 빠져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동북아세력균형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강요당할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동북아 세력균형은 외세인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과 북이 주도하여 조정과 균형을 추진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우리 남과 북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결코 조선조 말의 보잘것없는 수준이 아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주변 강대국의 경계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자 및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주변국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추진하는 세력 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평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한반도의 위상설정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시대를 열어 우리의 통일과 평화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자긍심 높은 민족행로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 또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동북아평화변영중심국가’로 올바르게 설정했으나 이미 미국에 대해 자발적 노예주의 외교정책을 펴고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 기조를 갖고 있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돌진하고 있다.

### 4. 대리전쟁터 도화선으로서의 주한미군

앞의 미국전쟁위협론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도화선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자기들의 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려 그들의 대리전쟁터가, 곧 청일전쟁의 재판이 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13) U.S. Dept of Defense,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12, 2002.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의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군 미군 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해 핵공격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가 그들의 대리 핵전쟁터가 되어 민족이 공멸하게 될 이 무시무시한 발표에 대하여 반대시위 하나 제대로 못했던 게 지난날 우리의 현주소였다. 바로 주한미군 문제는 냉전성역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곧 미국의 대리전쟁터로서 우리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우리 국군의 군사편제 및 작전권의 미군장악에 의해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고 이는 다시 남북 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것이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공공연히 주장해 온 것처럼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고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또한 저절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공격의 최전선인 주한미군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전개해 한반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전쟁의 불바다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곧 한반도는 또 다시 제2의 청일전쟁과 같이 미국 때문에 대리전쟁터가 되어 민족생명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핵전쟁으로 귀결되어 민족은 공멸하게 될 것이다.

미 국방부가 2002년 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는 선제 핵 공격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남한공격’ ‘중국의 대만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우선 핵공격대상이 바로 한반도와 중국인바, 어느 경우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셈이다. 남과 북이 주한미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 5. 미군주둔 영구화를 위한 MD체제 편입론

우리는 미국이 대(對) 중국 및 러시아의 군사적 봉쇄를 목적으로 한 MD체제

구축의 명분을 북한위협론에서 찾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칼 레빈 의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는 그들의 즉각적인 파멸을 이끌 뿐 아니라 그들의 제1목표인 생존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위협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의 김성호 장성민 김원웅 의원은 “북한의 재래식미사일 위협을 경고한 폴 월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한반도를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 한국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이런 발언은 동맹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적 무례… 수 백기의 방사포가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한반도의 MD체제 편입을 반대한다”는 비판성명을 냈다(한겨레신문 2001. 7. 15).

그리고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사일방어계획을 강행하기 위해 북한미사일을 빌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자주포, 방사포 등 장사정포가 서울에 훨씬 더 위협적이며 방어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이 자주포(170mm)와 방사포(240mm) 등 장사정포는 서울 등 수도권권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고 전술핵뿐 아니라 생화학탄두의 장착이 가능하며,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65km로 서울 관악산까지 90kg짜리 포탄 4752발을 일시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은 12개 대대가 18문씩(1문당 발사관은 22개) 216문을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다(내일신문 2001. 7. 16). 물론 이러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측과 주한미군 역시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인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호 군사력 대치의 전쟁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 군축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MD체제에 한국이 편입됨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빌미 MD론과 한국의 MD체제 편입론을 강변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한반도 미군주둔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다(문화방송, 2003).

MD체제가 구축되면 남북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장기적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되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바로 남한에 구축될 미국MD의 하위체계인 남한MD를 제일의 표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남한의 MD체제는 북한을 제1의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문화방송, 2003).

왜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을 위해 전쟁터가 되어야 하며 왜 우리 민족은 미국의 일방주의 세계지배를 위해 민족이 공멸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하는가? 21세기 강대국간의 무력충돌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일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혹은 러시아에 대한 무력공격의 전초기지로 삼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본토보다는 이곳 한반도, 곧 주한미군과 이에 예속되어 있는 한국을 1차 공격목표로 삼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또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이러한 민족공멸의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는 자살행위를 우리는 저지르고 있는 꼴이다(강정구, 2001).<sup>14)</sup>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존안보체제는 마치 고양이 같은 미국에게 우리의 생명권 같은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분명 안보체제라기 보다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체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존 대미의존 안보체제의 전면적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V. 한반도평화보장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90년대 이후 이제까지 허구적인 안보체제 속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는 무려 미국에 의해 여섯 번이나 전쟁위협을 겪는 안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제 우리 개인 및 민족의 생명권을 진정으로 보장받고, 평화통일의 필연적인 전제인 민족평화보장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북한겨냥 미국의존 안보패러다임에서 아래 표2에서 제시된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해야한다.

평화보장체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보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방향전환을 제시 하겠다. 패러다임은 과학공동체에 주제선정, 모델, 방법론, 해답 등에 기본 구도를 제공하는 과학공동체가 인정하고 공유하는 믿음, 가치, 기법, 시각을 포괄한 것으로

14) 바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김대중대통령은 부시와의 1차정상회담 때 남한의 MD체제 편입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한미관계가 냉랭한 사이가 되었다. 비록 단기적인 냉랭함과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민족생명권을 위해 김 전대통령의 이러한 확고한 정책지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점 노무현정부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로 문제해결의 보편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에서 이야기하듯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와 같은 개종을 의미한다. 이 같이 우리의 안보 및 평화보장체제에서는 전쟁위협을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북한위협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국전쟁위협으로 그 표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안보체제에서 미국과의 쌍무협정에 의존하던 것을 남북의존 및 동북아주변국과의 협력안보체제로 바꾸는 혁명적 발상전환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반도 안보 및 평화보장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내용들만 간략히 제시하기로 하고 이것만으로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안보(평화) 위협대상	안보(평화)보장체제	안보(평화)보장수단	기타
현존 안보체제	북한전쟁 위협	북한겨냥 미국의존 남한단독안보체제	쌍무주의, 북한주적론, 남한군비확충,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공조, MD체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미국전쟁 위협	미국겨냥 민족 동북아의존 민족평화보장체제	다자주의, 민족공조, 남북평화선언, 남북군축, 한반도평화보장선언, 동북아협력안보, 연합성연방 등에 의한 부분통일의 조기 실현	전시작전권 확보, 북한주적 폐기,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한미공조폐기와 한미우호관계수립, MD체제 미편입, 한반도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표 1]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족평화보장체제

#### VI. 현존 한반도 평화통일정세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정세는 그야말로 북미간의 極냉전체제로 이행하면서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고, 남북 간에는 脫분단체제에서 再분단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미국의 유일패권주의가 新패권주의로 나아가 동북아에서



동북아신냉전체제로 이행되는 시점이다. 이의 결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휩싸여 있고, 통일은 또 다시 5-60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 바탕에는 미국의 신평권주의를 주도한 부시정부와 남한의 노무현 정부가 있다.

### 1.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

미국의 북한축이기 정책에 의해 북 미간은 續냉전체제에서 極냉전체제로의 이행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초읽기에 들어 가 있다. 곧, 미국은 한반도를 그야말로 화약고 속으로 서서히 내몰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하나는 단기적 전략으로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에는 모든 군사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오산에는 북한에 대한 외과 수술적 폭격을 담당할 가공스런 스텔스폭격기용의 활주로를 건설 중이라 한다. '신속대응군'이라는 미 제3해병원정대를 동해 상에 배치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재래식 폭탄을 정밀 유도방식의 통합직격탄(JDAM)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한다.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 내부붕괴 유도를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인 5030이 만들어져 그 시나리오 1은 북한 영공근처에 미국의 정찰비행 강화(RC-135 등)로 북한군의 출격을 유도해 북한 항공유를 소진시키고, 시나리오 2는 대규모 기습 훈련을 지속해 북한군의 동원을 유도해 북한 군수물자를 고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준비는 '북한 악마만들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과 황장엽 등을 미국에 불러 북한의 인권문제, '마약', '불법외화벌이' 등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진행시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명령만 내리면 바로 침략을 하게 되어 있고 조작된 여론의 뒷받침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 봉쇄정책에 의한 장기적인 대북한 고사작전이다. 북한에 대한 해안봉쇄와 경제봉쇄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만경봉호 일본 입항의 사실상 금지와 북한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 총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대북 송금 제한 등이다. 여기에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는 미명아래 10여 개국으로 구성된 미국-일본 중심의 국가들이 자기들 멋대로 유엔 밖에서 북한의 미사일 등 수출을 봉쇄하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 나포 등을 공공연히 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국제법을 위배하는 해적같은 행위를

북한에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한을 참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제까지 취한 대미 예속정책 때문에 동참하게 틀지어져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6월 13일 열린 한미 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에서 북한 마약 거래와 위조 지폐 발행 단속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봉쇄전략의 1단계 조치이다. 여기에다 김희상 국방보좌관은 7월 3일 '이라크 전쟁과 국가안보질서'라는 연설에서 통일전쟁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야말로 미국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이어 통일신라 식의 반민족적 통일전쟁을 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惡의 軸'이자 어떻게 하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대표적 안보 위협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미 나름의 既계획된 레일 위를 구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그 최종 목표와 최종적 수단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 한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면 한국이 대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용기와 단호한 의지로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미국의 정책에도 적절한 leverage를 확보한다면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런 지도 모른다.

남한의 봉쇄참여는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북한이 이를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자동적으로 폐연료봉 재처리 등 북한의 강경 대응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북 미간의 極냉전은 열전으로 비화되고 민족은 엄청난 참화를 입을 것이다.

6 15 3주년에 기념식은커녕 골프를 치는 노무현,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민족의 혈맥을 잇는 행사에 겨우 국장급을 파견하는 노무현정부,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화 구도 수용, 자주국방이라는 빌미로 남북 간의 군비경쟁 가속화 등 군사력 증강정책 등은 노무현 정부가 이미 再분단적대체제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 전형적인 숭미주의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또 통일전쟁을 노골적으로 주창하는 자를 국방보좌관으로 두고 있는 노정권이 과연 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 기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한다.

아래의 다양한 전쟁임박위기의 조짐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대북한 침략전쟁을 감행할 만반의 군사적 준비는 다 갖추고 있어 명령만 내리면 곧바로 침략전쟁이 가능한 구도이다.

: 정밀폭격을 위한 F-117스텔스폭격기 배치와 이를 위한 오산의 활주로 건설,  
: 작전계획 5027의 부속문서로 수도권 방어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2003년 1월 6일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하고 7월까지 완결기로 한 우발계획,  
: <뉴욕타임스>(03.2.28) 크리스토프 기고한 '무섭고, 비밀스러운 계획(Secret, Scary Plans)',

: <더 오스트레일리안>(2003.4.22)이 보도하고 호주외무장관이 확인한 정밀폭격 시 영변과 휴전선 동시 폭격

: 럽스펠드의 "김정일 정권 붕괴" 메모(NYT 04.20),

: 노무현 방미 특사단에 북폭 타진,

: 3자회담에서 북한의 대범한 제안 미국의 단호한 거절,

: 美 국방부, '북폭' 위해 2002년 연말과 03년 연초에 극비리에 북한 지질조사(교도통신 03.5.20)

: 켈리 박관용 국회의장에 북한붕괴 언급, "후세인 동상이 무너진 것처럼 김일성 동상도 그렇게 될 것"

: 오키나와 주둔 미 3해병 원정대 신속기동군 500여명 고속정으로 22시간 내 경북 포항에 도착 훈련

: 해안봉쇄와 경제봉쇄 입안과 선택적 제재(selective interdiction) 시행

: 대북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 거래 봉쇄방안)용 11개 다국적군 창설협의

: 미 제3해병원정대의 '신속대응군' 1개 중무장여단 한반도 해상 추가 배치(<문화일보> 2003.5.28)

: 주한 미 7공군 보유의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을 GPS 정밀 유도방식의 통합직격탄(JDAM)으로 교체

: 북한과 김정일 겨냥 소형핵무기 핵 벙커 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 개

발 착수

: 미국방부 자문기관 국방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펠 전 위원장 '단독 북폭' 첫 언급(03.6.11)

: 노무현정부 대북 봉쇄 가담. 6월 13일 한 미 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에서 미 일의

북한 마약 거래와 위조 지폐 발행 단속이라는 봉쇄전략 1단계에 적극 동참

: 김희상 국방보좌관 통일전쟁의 결단을 역설

: 북한 내부붕괴 유도 美 새작전 '5030'구상(03.07.14)--사나리오 1, 美정찰비행 강화(RC-135 등)→北 출격

유도...항공유 소진, 시나리오 2, 美기습 훈련→북한軍 동원 유도...軍물자 고갈

: 대북한 침공실전훈련의 지속

: 페리 전 국방장관 올해 안에 전쟁위기와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와싱턴포스트 03.7.15)

: 미의회조사국 래리 너시 연구원 7-10월 전쟁경고(Far Eastern Economic Review 7월17일 기고)

--북한정권교체는 부시정부의 정책목표이며 "미국의 군사계획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적 공격에서부터 다수의 공격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타격계획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7-10월은 한반도 내부의 주변에서 위험한 시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

## 2. 한반도 통일정세

이미 미국은 지도적 패권주의가 아닌 철저한 군사력과 전쟁에 의존한 폭력 중심의 지배적 패권주의로 세계지배를 피하는 신패권주의를 정형화했다.<sup>15)</sup> 특히 부시독트린은 21세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 자체를 미리 분쇄시키는 정책을 노골화했고 그 표적으로 중국을 상정해 대중국포위전략을 구체화했다. 일본, 대만, 호주, 남한, 아프카니스탄, 중앙아시아, 필리핀 등을 끌어들이며 군사동맹을 굳건히

15) 이에 관해서는 강정구,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 강정구,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하고 MD를 바탕으로 군사 기술적, 통합체제를 편성해 미국군사전략체제에 묶어둔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지원하여 미일 군사동맹을 미영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남한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미국의 강력한 동북아지역군으로 예측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본 구도를 띠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쓰면서 이미 미국다음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일본은 이미 주변사태법이나 유사법제 등을 통해 법과 제도적 준비까지 거의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지배전략에 민족공조를 폐기처분하고 대미예속공조를 고착화시키는 신한미군사동맹 정책을 노무현 정부는 앞서 채택함으로써 자발적 대미 노예주의성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이는 공동성명, 주한미군 영구주둔 허용, 이지스함과 PAC-3미사일 도입 등에 따른 MD체제 편입, 한국군의 미국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통합과 편입, 자주국방이라는 빌미하의 대대적인 군사비 증액과 군전력 증강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맞이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6.15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무현 정권이 제시한 한반도 미래상인 동북아평화번영의 중심국가들을 위해 한미상호방위 조약-한미소파-전시작전통제권 등의 개정과 환수 등 군사적 자주권, 주한미군 철군, 냉전체제 해체, 평화협정 체결, 민족공조, 동북아협력체 등을 긴요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거역한 채 남북의 再분단화, 북미의 極냉전화, 동북아의 新냉전화의 첨병으로 나감으로써 반민족과 反평화라는 파국의 길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내몰고 있다.

우리는 과거 미 소냉전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또다시 지구촌이나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아무리 남북공조를 취하여 통일을 이룩하려 노력하더라도 이 신냉전에서 오는 강제력 때문에 민족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까지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2025년경이면 중국의 국민총생산액(GNP)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면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이고 야만적인 동북아 패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곧,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간에 신냉전이 도래하게 된다. 만약 그 시점까지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남과 북은 또 다시 과거 미소냉전 시대와 같이 북은 중국에, 남은 미국에 종속되어, 민족의 재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민족분단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신냉전 도래 이전에 부분통일이라도 이루어 이 지구촌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정 사실화하여 우리의 통일을 굳히는 작업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 같이 통일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통일외적 조건과는 대조적으로 통일의 대내적 조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1999년 남북 GNP가 각기 4천억과 160억, 2000년의 국민총소득(GNI)이 168억달러(18조9천억원) 4,552억달러(514조6천억원)의 달러가 보여주듯이 27:1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교전이나 국방부의 북한주적론 철폐 논쟁에서<sup>16)</sup> 확인한 것처럼 대북 적대가 높고, 북한을 동등한 통일동반자로 수용하지 않아 통일성숙도가 미약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대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이는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제도와 구조적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통일기반이 저조한 조건에서 급박한 독일식의 통합적 통일을 이루었을 경우, 이는 북한을 내부 식민지화하는 민족 분열적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16)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단지 가상의 적을(hypothetical enemy) 상정하고 있지 주적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남한만이 구체적으로 주적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야말로 지구촌 보편사의 흐름에도 어긋나거니와 민족의 하나됨을 응당 모색해야하는 민족사에도 배반을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초를 전혀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정훈공보실이 2003년 7월4일 7.4공동성명 기념일에 배포한 '정신교육 교재'를 통해 주적 개념을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무단하게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해 적화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거나 북한의 대남 적화기도를 지원, 동조하는 세력>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거나 북한의 대남 적화기도를 지원하는 세력> 등을 적으로 명시했다. 통일뉴스 2003-07-04

높다. 곧, 남북 간의 역량차이가 너무 심대하고, 남한의 통일역량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수용하기보다는 흡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적대의식이 아직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통일동반자로 수용하는 통일성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1국가1정부1경제체제의 급박한 완전 통합적 통일은 북한을 내부식민지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 필연에 가깝다.

이에 우리는 북한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남북 간에 형성된 '제2자연화'의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통일동반자와 상호주체로서 인식하는 통일성속도를 높여서 내적 통일기반 조성을 서둘러 지배와 예속의 민족 분열적 통일을 막는 역사행로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통합적 통일은 가급적 지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신냉전의 도래라는 외적 통일정세는 통일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외적 조건의 통일긴박성을 통일 내적 조건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 이 현상이 바로 통일딜레마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통일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바로 6.15공동선언 2항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6.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이 2항은 연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결합한 통일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을 내부 식민지화할 민족 분열적인 완전 통합적 통일이 아닌 부분통일을 가능하게 하여 이 통일딜레마에 대한 돌파구를 연 셈이다. 공동선언 2항은 남측 공식적 통일방안의 기본적인 문제점인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북측 통일방안의 기본적인 문제점인 단기간의 군사 및 외교권의 통합이라는 비현실성을 극복했다. 이로써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남과 북이 서로 경계하는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의 우려가 극복된 셈이다.

이러한 통일딜레마의 정세 속에서 노무현 정부의 과제는 한편으로 남북이 공조와 주도로 부분통일의 진일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5개국간의 동북아협력체를 강화해 미국의 동북아신냉전을 최대한 연기시켜 부분통일을 위한 시간벌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대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참여정부는 전형적인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전쟁 묵인 내지 동조하고 있다. 둘째, 핵 경험 연계정책의 수용 등으로 민족공조 파기와 남북 간 再분단체제화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다. 셋째, 국방비의 GNP 대비 3.4-5%증액으로 한국의 MD체제편입을 가속화해 강력해진 예측적 신한미군사동맹관계를 고착 심화하고 있다. MD체제에 한국군이 편입되면 군사적 자주성은 완전 사라지고, 한국군은 미

국의 지역군으로 축소되어 주한미군에 영구히 주둔할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미군주둔의 영구화와 한국군 동북아지역군 편입, 대대적인 군사비 증액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군사대결주의로 나아가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의 철저한 하위체계로 통합되어 미국과 중국간의 동북아신냉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이로써 노무현의 '동북아평화번영 중심국'이라는 한반도 미래상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의 일환에 편입되어 동북아신냉전이 전개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장기적 전망은 완전 상실되어 새로운 남북再분단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수정이 없을 경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남북관계는 6.15이전의 원점으로 회귀, 신한미군사동맹으로 한국의 완전한 대미예속으로 민족자주성의 근원적 훼손, 자주국방은커녕 미국의 완전한 종속적이며 강력해진 한국군의 미국지역군으로의 편입, 동북아군사대결주의, 동북아평화번영의 미래상 전망 완전 상실 등으로 귀착될 것으로 예견된다.

## VII.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제

### 1. 한반도 평화통일 구도의 지각변동 추이

6.15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통일 행로를 단순화한다면 외적으로는 미 소간 또는 북 미간의 냉전적대체제, 내적으로는 남북 간의 분단적대체제라는 2중의 적대체제에서 미 소간의 냉전체제 소멸과 북 미간의 續냉전체제와 남북 간의 脫분단체제로의 이행이었다. 그래서 남과 북의 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북미간의 續냉전체제를 완화 및 해소시킬 수 있어 통일시대를 민족 스스로 열 수 있는 구도를 만든 셈이다. 이 점에서 6.15공동선언은 민족사의 대장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응당 이 선언을 신주 모시듯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권 출범과 남한의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북 미간의 續냉전은 극단적인 極냉전체제 속에 빠져 있고, 서서히 미국의 대북한 침략전쟁으로 이어지는 열전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연동되어 남북 간의 脫분단체제는 다시 再분단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 소간의 냉전체제 대신 미 중간의 동북아 新냉전이 서서히 점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불씨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정부가 제 위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부시정권이 주조하

는 이들 極 냉전체제, 新 냉전체제, 再 분단체제 형성의 첨병역할을 자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러한 장기 구조적 지각변동의 추이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단기적, 중기 국면적, 장기 구조적 과제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시론에 불과하기에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단편적인 과제의 논의에 한정하겠다.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	참여정부 미국의 재분단--신냉전 추종 정책	동북아평화번영정책 조건	기타
세계사적 관계	냉전기-->탈냉전기	냉전기-->탈냉전기	냉전기-->탈냉전기	
북미관계	속냉전-->탈냉전	속냉전-->극냉전기-->열전 진입기	속냉전기--> 탈냉전기	
동북아 관계 (중미관계 중심)	탈냉전. 동북아협력체의 서막	탈냉전-->동북아신냉전 태동. 동북아협력체 전망상실	중미신냉전 未 본격화, <u>탈미 동북아협력체</u> 조건 진전	한미일삼각군사동맹과 MD체제의 진행정도에 남한의 편입정도가 관건임
남북관계	분단적대기-->탈분단적 대체제	탈분단-->재분단 태동	재분단-->탈분단 평화 공존	노정권 북미열전 막을 역량과 의지 빈약
한미관계	예속기-->예속 완화기	예속완화기-->재예속화	재예속화-->자주화	노정권 한미일동맹과 MD체제 첨병역할 자임

표3. 한반도 평화통일 구도의 지각변동 추이

## 2. 장기구조사적 과제

위의 통일정세 논의에서 우리는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내에 부분통일을 완수해야만 과거 미 소냉전과 같이 통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시정권 이후 이 동북아 신냉전 도래는 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우리 자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늦추는 것과 신냉전 도래 이전에 부분통일

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구조사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 중국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동북아군사패권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미 동북아협력체의 형성을 꾀해야 한다. 이 협력체는 시베리아개발 중심의 경제협력체를 통해 동북아5개국의 공통이익을 진전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안보협력체를 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MD체제는 한미일군사동맹체제를 묶는 토대가 되므로 남한은 결코 이 MD체제에 편입 및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킨다. 미군주둔의 당위적 논리로 주장되어 왔던 북한전쟁위협론, 남한군열세론, 동북아세력균형론 등은 사실과 다른 허구이고 오히려 미국전쟁위협론, 남한군우세론, 미군주둔의 동북아긴장론이 역사의 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해 전쟁과 긴장의 주범이고 동북아신냉전의 첨병인 미군을 전면철수 시켜야 한다.

넷째, 남북사이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이에 따른 남북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남과 북이 쉽게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이나 신의주특구 등의 한국기업 참여와 정부차원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단기적 퍼주기라 아니라 장기적 통일투자로 인식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6.15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연합성연방단계로 진입하여 부분통일을 이룩한다.<sup>17)</sup>

**연방성 명명등일**

**동합적 통일될 때 북은 연방 내부  
원거될 것. GNP 차이 27대 1.  
4.19 여부는 다르다.**

## 3. 단기적 과제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미간의 전쟁위기가 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달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선 것 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이르면 아마도 올해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긴급히 경고를 했다. 이어 그는 “우리(미국)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부시 행정부와 남한 그리고 중국의 고위관리들과 최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 면서 전쟁위기의 화급함을 전하고 있다(<와싱턴 포스트> 03.7.15).

17) 이에 관해서는 강정구,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을 주창하며” 강정구, 위의 책 2002

현재의 단기적 과제는 무엇보다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한반도 침략전쟁을 막는데 모아져야 한다. 미국의 대북한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적 준비태세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명령만 내리면 곧바로 침략전쟁이 가능한 구도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획책에 대응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한다.

먼저 북한핵에 대한 전향적인 해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인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실질적인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100억달러(경수로 건설 비용 50억 달러 상당과 나머지 사회간접시설 등의 지원비) 수준의 한반도 판 마살계획 입안과 발표.

: 북한의 핵동결을 담보하는 조건

: 미국의 대북 불가침을 전제하는 조건

: 사찰은 스웨덴, 러시아, 중국, 남한, 미국, 일본(만약 일본이 자금을 부담하면)으로 구성된 다국적 사찰팀이 전담하도록 할 것

: 모금은 국가예산가운데 내년 군사비 예산 200억 달러 가운데 증가분 50억 달러를 할애하고(미군기지 이전 등 모든 전력증강계획 중단), 나머지는 전쟁막기 모금운동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2. 현존 전쟁위기의 빌미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6+2'(동북아5개국과 미국의 한반도평화보장 공동선언 + 북미 불가침협정) 합의에 의한 장기 포괄적 방식의 해결을 모색하도록 남한 정부의 역할을 견인 및 강제한다. 이에 대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북미간의 불가침조약에 의한 해결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동의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

2) 북미간의 조약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제네바합의와 같이 미국의 일방주의와 막가파주의 때문에 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어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 높음.

3)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보장선언(단기적 목표) 및 평화체제(장기적 목

남북을 넘어 리얼 : 비핵화선언, 평화보장선언  
 ↑ 경제발전은 물론, 핵외관측자들이 한반도 위협  
 ↓ 미국 양쪽  
 남한이 더  
 강하게 강제  
 해야.

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미국이 위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함

4)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불가침협정(조약이 아니라도)을 체결

5) 지난 9월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지각변동이 일어나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동북아협력체로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어 다자간 합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6) 철의 실크로드로 인한 동북아경제협력구도가 진척되고 이 구도 속에서 '한반도시대'의 개막이라는 장기적 전망과도 직결되어 있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야 함

7) 미국의 다자회담은 '6+2'와 달리 남한, 일본, 러시아 등을 미국의 들러리로 세워 숫자로 밀어 부치는 격임

8) 핵문제 해결은 미국에 애걸외교나 미소외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라크 전쟁에서 입증됨. 그러므로 동북아국가의 연대에 의해 미국을 제동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음 급박한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이다.

1. 한국군의 모든 북한겨냥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중단한다. 그리고 미국에 남한 내의 미군단독 군사훈련도 북한에 대한 도발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중지를 요청한다.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그 제도상 우리의 대통령이 전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군사주권 노예의 상태이므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통제권을 형식상 발휘할 수 없다.18)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응당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를 요청해야 한다.

2. 남한 정부의 무력 불사용 천명과 남한의 모든 미군 시설과 기지가 전쟁용으

18) 지난 2월 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당선자 노무현은 전쟁의 위험성과 작전지휘권의 상실로 인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을 조율해 전쟁 위기를 막아야 한다...왜 퍼주고 싶겠느냐. 퍼주기가 아니다.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 시대는 남북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인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낫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축구대회를 중산층 중심으로 조직하고 운동을 펼쳐 나간다.

3. 남한 정부의 일체 대북 해안봉쇄나 경제봉쇄의 참여를 거부하는 선언 발표 또는 이를 시민사회에서 강제

4. 남과 북이 다함께 긴급정상회담이든 총리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반대선언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찰머스 존슨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정책은 북한정권교체론으로 확정지어져 있어 3자회담이나 다자회담 등은 시간 벌기, 명분 쌓기 용의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5. 전쟁방지특별기구를 범국민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남북동수 구성의 한반도 전쟁방지특별기구를 민간, 군, 관이 함께 참가하는 형태로 발족시킨다.

6. 현재의 위기를 조장하는데 기여한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공조하여 통일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방보좌관 김희상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가 이를 강제해야 한다.

7.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북한 핵과 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을 철폐하여 남북 사이의 공조와 화해협력을 지속시켜 미국의 전쟁기획 명분을 최소화시키고 한반도 주변국의 연대를 확충한다.

8. 사회운동 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현 대북 및 대미 정책에 대한 전면대치전선을 형성해 그 기본 구도를 바꾸도록 강제 및 견인해야 한다.

9. 미2사단의 기지이전은 대북한 선제공격 조건을 용이하게 하므로 현재의 전쟁 위기가 해소되기까지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미국이 가지는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4. 중기 국면적 과제(추후 보완)

1. 한미공조 우선주의에서 남북공조와 동아시아 공조우선과 한미공조 보조주의로 기본 방향 재 설정.

2.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장기적 준비

5. 운동진영의 문제점

1) 통일운동진영의 문제점

: 일부는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과대망상에 빠져 전쟁위기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이다. 이는 통일운동 진영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김을 빼는 역할을 한다. 북한군사력을 믿는 다고 과신하는 등 강진육기자 등의 전쟁불가론이다.

: 다른 일부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이번에도 으레 북한이 잘 넘길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류이다.

2) 일부 시민운동이나 국민의 북한핵문제, 주한미군문제, 전쟁위기에 대한 인식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 미국과 북한을 동격에 놓고 비판하는 양비론

: 인권문제 제기에서 인권의 인권인 생명권 위협에 대한 문제제기 실종

: 전쟁자체나 끊임없는 미국 전쟁위협론이 남북한주민 수천만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성을 가진 점에 대한 불철저한 문제의식

: 반핵문제에 대한 불균형적인 접근으로 강대국의 핵무장에 대한 문제제기 미흡

: 보편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반미의 정당성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 등

: 미국과 주한미군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근본문제 인식한계

### 3) 시민운동진영

: 화급한 문제를 화급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

: 자유주의적 평화의 문제만 매달려 기계적으로 평화문제를 해석하지 말고 역사적 맥락에서 전쟁위기의 화급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조주의적 사고의 극복이 요구됨

## IX 맺음말

미국의 북미제네바협정 위배로 불거진 한반도전쟁위기는 미국의 시간 벌기, 명분 쌓기, 다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전쟁명분 모으기와 더불어 전쟁관련 모든 군사력 준비, 배치, 재조정 등이 추진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침략준비를 군사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언제든지 미국이 대북침략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준비는 북한에 대해 단기적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단기전쟁전략과 해안봉쇄 등을 통한 장기적 북한 고사전략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한 경제와 해안봉쇄는 북한의 생존권을 옥죄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제적 악화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련이다. 이에 북한의 생존권을 위한 대응이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이 북한의 대응을 빌미로 단기적 전쟁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서 한국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신한미군사동맹을 맺어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총합되고, 주한미군이 영구히 주둔하고, 한국군은 미국의 지역군의 역할로 축소되어 예속의 군대로 자주성을 온전히 상실하고, 한미일 3각군사동맹은 더욱 공고화 되게 된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국 또한 미국과 일본에 따라 전력증강주의와 군사대결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철저히 미국의 동북아신냉전구도의 전초기지가 되고 앞잡이가 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구도를 대결과 긴장의 구도로 나아가게 한다. 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간의 적대는 심화되어 한반도가 제2의 냉전으로 회귀된다. 이 경우 민족의 생명권과 평화권 그리고 통일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우리 민족은 심대한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보에 재갈을 먹이는 일이 긴급히 요청된다. 개혁의 여러 과제 가운데 바로 대미 자주와 평등권확보와 평화통일기반조성만큼 핵심적인 과제는 없다. 다른 종류의 개혁과제는 대부분 국내의 역량만으로 상당부분 진척될 수 있는 구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신한미군사동맹 등은 지구촌 야만의 제국인 미국과 그 하수인인 일본에 의해 주조되고 강제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령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내적 역량으로 헤어져 나오기가 극히 어렵다. 이러한 파국적 반민족적 행보인 신한미군사동맹 책략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미국에 의해 제2의 분단과 제2의 냉전을 강요당하고 자주권은 영구적 상실로 귀결되어 노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여 신식민지적 예속 하에 놓인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나? 그것은 일본식민지 전 기간의 두 배에 가깝다. 또 분열된 후삼국시대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게 오랜 동안 미국의 예속 하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졌단 말인가? 무려 58년 동안 한미공조를 금과옥조처럼 떠 받쳐 온 결과가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이었고 통일가로막기였다. 이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한미공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에 걸 맞는 민족공조 우선주의와 한미공조보조주의로 근본적인 탈바꿈을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제도수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화급한 현존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신 한미군사동맹 막기에는 이남과 이북, 정부와 시민사회,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전교조와 한국교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상도와 전라도가 따로 없다.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서 촛불을 높이 들고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권, 그리고 자주권을 쟁취하고 강제할 때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멀지라도 또 갖가지 시련에 직면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부과된 민족사적 책무이고 이성의 구현으로서 역사가 요구하는 당위적 역사행로이다!

(참고문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잠정의 것임

도움 받은 글

강정구, 1997. "박정희정권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38호 1997년 가을호.



강정구, 1999., “김대중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포용정책의 민족친화성과 신자유주의의 반 통일성” 진보평론 창간호.

강정구, 2000. “김영삼 정권의 민족사적 평가”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4집, 2000년 겨울호

강정구, 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한국산업사회학회 제2회 비판사회학대회 논문집,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의 진보로, 한울출판사

강정구, 2001.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통일정세” 한신대학교 출판부,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김성환·김정원 외, 1984. 1960년대 (서울: 거름)

노중선, 1985 “분단과 통일문제 논의의 역사적 배경” 노중선엮음, 민족과 통일-1: 자료편 (서울: 사계절)

노중선엮음, 1985-2 민족과 통일-1: 자료편 (서울: 사계절)

노중선엮음, 1996.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편, 서울대학교 한·미관계연구회편, 1986. 프레이저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서울: 실천문화사)

박세길, 1993. “인간 박정희 변절과 권력욕의 화신”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간 21호, 1993년 여름호

서중석, 1995. “한국전쟁후 통일사상의 전개와 민족공동체의 모색”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양영식, 1997.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정용길,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의 분열과 통일” 노명식의, 역사상의 분열과 재 통일(하), 일조각, 1993

정재경, 1992. 위인 박정희 (서울: 집문당)

정해구, 1995. “대화와 갈등의 남북관계”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 평화운동의 발전방향과 아시아 평화연대

박순성 등국대, 참여연대

### 1.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sup>1)</sup>

#### 가. 2002~3년의 경험 -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1980년대 말 미·소 냉전구조의 붕괴 이후 상당 정도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사회의 전 영역에서 민주화의 실질적인 확장과 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 사회에서 냉전질서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냉전질서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단일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질서의 변화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부정책과 사회가치를 둘러싼 갈등의 형성과 표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남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가 2002년 하반기 촛불추모시위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대립이며, 2003년도에는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싸고 대립이 나타났다.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한국전쟁 이후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남한 시민사회가 여전히 허약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준다.

촛불추모시위, 대통령선거,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에서 핵심 쟁점은 한미관계와 한미군사동맹의 성격, 북한핵문제 관련 정책, 미국 단일패권 하 한국의 국가전략 등이었다. 이러한 쟁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국가전망 차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양상은 매우 단순화된 모습을 띠었다. 반

1) 1절은 문화일보·학술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학술심포지움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 (2003. 7. 25)의 발표문 “냉전적 질서의 극복과 시민사회의 과제”의 4절을 수정한 것임.

미와 친미, 친북과 반북,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반전과 반핵, 평화와 국익 등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가 여론을 양분화하고, 소위 '국론의 분열' 또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는 이름으로 합리적 토론과 정책대안의 모색을 막았다. 갈등 자체가 나타나는 양상에서 냉전적 질서의 논리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냉전적 질서유지와 탈냉전적 현실비판 사이의 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 표출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갈등은 세대간 차이, 지역간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이 점은 냉전적 질서가 한국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인구학적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에 기초한 지역패권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냉전적 질서는 단순히 과거의 현재에 대한 지배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지배질서의 한국적 존재형태인 것이다. 둘째, 갈등의 초점은 정부의 정책이나 개인의 견해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이념체계와 직결되어 나타났다. 반미, 친북, 민족공조, 반전, 평화는 정치공동체로서 한국의 국가적·사회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태도이자 가치로 낙인이 찍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한 차례 불거졌던 국체(國體), 국기(國基)와 관련한 논란이 재연된 것이었다.<sup>2)</sup> 셋째,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은 종종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과 여론매체를 통해 국민 대중의 실질적인 인식보다 과도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국민 대중보다 훨씬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론주도층과 대중매체에 의한 '점화효과'(priming effects)로 인해 국민 대중 차원의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에서 냉전적 질서유지와 탈냉전적 현실비판 사이의 갈등은 언론과 여론을 둘러싼 싸움—종종 매체전쟁의 형태로 나타난—이자 사회적 주류집단 형성을 결정짓는 경쟁이었다. 사회문화적으로 본다면, 이는 냉전질서가 만든 군사문화, 전쟁주의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2) "만경대방명록사건은 각성된 통일운동과 보수적 국민정서라는 두 축이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준 전형적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민족의 근현대사와 냉전적 대북인식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이 사회세력들간의 대결로 비화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 이념적 문제로 그리고 남북관계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국체(國體)와 국기(國基)를 부정하는 식의 통일논의'(동아일보, 2001. 8. 23 사설)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비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념적 폐쇄성과 극단성을 드러내었다(한겨레신문, 2001. 8. 22 사설). 교류 협력의 발전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이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이 사건은 분단극복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조정해 나갈 사회적 소통의 공간과 윤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었다." 박순성,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8~2002년)과 평화통일," 북한연구학회보 6권 2호, 2002. 12 참조.

결국 냉전적 질서의 극복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로서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의미한다. 국가적·사회적 정체성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치공동체로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의미할 것이다.

#### 나. 대중성과 자기검열 - 평화운동의 조건

한국 사회를 위한, 나아가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잠정적으로 '평화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과 혁명의 패러다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냉전적 질서를 타파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충분히 급진적이면서도 실천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급진성과 실천성을 함께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냉전적 질서가 남한의 시민사회에 세워놓은 세 개의 벽에 주목한다. 한미관계 또는 ①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이중의식(의존과 자주), ②북한과 북한지도부에 대한 두 개의 태도(적대와 포용), ③국가안보제일주의와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 이 세 개의 벽은 평화운동에 대해, 때로는 대중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검열이라는 무의식적 통제장치로 작동한다.<sup>3)</sup> 남한의 평화운동은 바로 이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 한미관계에 대한 이중의식 - 의존과 자주

한미동맹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군사·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3) "김정수 | 한 마디만 덧붙이면, 저는 지금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같이 선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고민이랄까, 비대칭적인 한·미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나 패배주의, 그 결과 나타나는 자기검열 같은 것을 시민단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사실상 평화운동의 커다란 과제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전망 2003 여름, "좌담 - 한반도 주변 정세와 평화구축의 과제," 48쪽.

(비대칭적 동맹). 또한 한미동맹은 남한의 이익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남한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많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상호이익동맹이자 불균등동맹).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단일패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려는 한국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점차 작동하고 있다(예, 남북관계 발전,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 모두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라는 압력을 내부로부터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북한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얽혀 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심지어 평화운동 진영에 대해서조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존에 대한 비판과 자주 자체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안보전략과 관련한 철학과 전망에 기초하여, 현 단계의 논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sup>4)</sup> 미국의 의제설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발상의 전환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질서는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특히 최근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질문은 더욱 긴급하다. 한반도의 안정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재 또는 공공재라는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은 남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에게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정 없는 동아시아의 안정은 불가능하며, 동아시아의 안정 없이는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심각한 국익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논리가 필요하다. 둘째 남한의 경제위기는 가까이는 일본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부

4)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식의 현실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 “[안보전략 차원의 주한미군 문제와 종속적 동맹 형식 차원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로 집약할 수 있는 전자의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미 동맹의 불평등성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택상,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주한미군 문제,” 이론과실천, 2002년 6월호, 31쪽.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한의 경제안정이 갖는 적극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에 기초한 관점이나 정책’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약화가 남한 사회의 모든 것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책’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유지가 남한의 역량과 기회를 제한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국제정치학에서 강조하는 현실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는 인식론적 장애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미래의 변화된 동아시아질서를 상정해 본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미간의 긴장은 ‘중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강화된 한미동맹을 통해**

**궁극적 한미동맹 체제 해체.**

#### 북한에 대한 두 개의 태도

분단체제 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공통일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반공주의에 기초한 적대의식에 대립하여, 민족의 정통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이 종종 진보진영 내부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민족사와 관련한 일종의 ‘부채의식’,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유보적 관점’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파악하는 데에서 ‘인식론적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 역사적 정통성

북한의 핵무기개발전략과 인권상황에 대한 민족적 관점, 민중적 관점, 평화적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는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 진보진영의 고

5)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영구주둔인가 중장기적 철수인가’라는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영속화가 정당화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정화 세력 또는 균형자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오히려 패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한다. ‘미 제국주의’라는 표현은 미국 스스로가 즐겨 쓰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둘째,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안보협력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견제, 봉쇄, 포위의 전략을 쓰고 있다(소위 미-일-한 삼각동맹의 강화와 확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의 일차적 원인제공자이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 최소한 소극적으로나마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평화유지 세력에서 평화만들기 세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 압박정책을 넘어 대북 선제공격론조차 내세우고 있다.

민을 잘 보여준다.6)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과 이해를 적절히 표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오해가 존재한다. 일차적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중요하다. 첫째는 북한의 실체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이며, 둘째는 보편적 가치·판단과 특수한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유지하는 일이며, 셋째는 북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전략의 제시이다. 단순화시켜 표현한다면 평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 민중의 관점에서 북한 체제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늦추지 않아야 하며, 그와 함께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다소 모호하게 표현한다면 선의의 비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북한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과 대미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이 필요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의 부드러운 충고가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비판적 냉정공민

####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 -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남한 사회의 평화운동은 무엇보다도 국민국가중심의 안보관을 벗어나야 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간 불균형(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이 심각한 동아시아에서 지역안보협력체제는 국민국가 중심의 안보관에 의거해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전쟁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공유될 때, 지역안보협력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또는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중심국가 또는 중심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가교 또는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안보질서와 안보관에 기초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현실주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검열기제일 뿐이다.7)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외교정책의 큰 틀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6) 김승국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세계적 반전평화운동을 변혁지향적인 반전평화운동, 개량적이고 시민사회지향적인 반전평화운동, '제3섹터' 반전평화운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이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의 지형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김승국,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 이라크전쟁 반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전망 2003 여름, 114~7쪽.

7) "스스로를 약소국가로 규정한 현실주의는 부당한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방기이며, 타인이 강요하는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자기검열이다." 교수신문 2003. 4. 7.

평화운동은 평화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운동이다. 평화문화운동은 우리의 오래된 민족해방전쟁의 논리를 거부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공생과 다양성의 삶, 또는 관용의 질서를 생활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국익론이 갖는 도덕적 파괴(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살상할 때 파괴되지 않는 인간성이란 없다)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국익론은 성장제일주의에 길들여진 우리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평화문화는 우리를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불평등과 갈등의 세계화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8)

평화운동은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을 요구한다. 평화운동은 억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한다. 평화운동은 환경운동이자 평등주의운동이다. 잘못된 사회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익론은 언제라도 다시 우리를 억압할 것이다. 국익론은 역설적으로 파병이 가져다 줄 이익의 불평등성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파병동의안에 대한 지역, 계층, 세대에 따른 지지도 차이). 국익은 허구이자 이데올로기이다.

결국 평화운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경제중심주의나 성장제일주의, 국가중심주의나 안보제일주의로부터 벗어날 때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이성을 요구할 것이다. 공존을 위한 감성, 보편을 위한 이성은 평화주의자 칸트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지 않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식, 이익의 계산으로부터 자신을 억제하는 이성은 평화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각성이다. 안보합리성과 경제합리성을 버릴 수 있는 '불구의 이성',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버릴 수 있는 '이차적 또는 자발적 불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소하게는 우리의 언어습관, 시민운동의 형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언론감시운동과 생활양식변화운동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대중성이 없는 평화운동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대중성이 대중추수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냉전적 질서가 강요하는 자기검열에 빠지지 않으면서 현실-자기 자신의 의식조차 포함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때, 현실타파

8)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정전 50주년 2003 평화문화캠페인으로 내건 "3 적게 3 많이: 적게 먹기 적게 쓰기 적게 화내기, 많이 웃기 많이 듣기 많이 참여하기"는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운동",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평화문화운동이다.

적인 평화운동이 가능하다. 막연하지만 이분법적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또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눈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세계평화운동의 보편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현실 해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9)</sup>

#### 다. 한국 사회 평화운동의 과제 - 북·미 갈등 해결 노력과 중장기 발전 방향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에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한 현 상황에서 남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평화운동 차원에서 현실문제에 대한 접근은 시급성과 근본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사안의 시급성은 북·미 갈등의 해결이 가장 높다. 하지만 남한 사회 내부의 평화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다면, 남한 사회는 북·미 갈등을 조절해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북·미 갈등은 평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 사회 내에서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일은 근본적이면서도 늦추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미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한 시민사회 내부에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북·미 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에게 북·미 갈등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알리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국내·외에서 벌이는 일이 중요하다.<sup>10)</sup>

대중성 및 자기검열과 관련한 논의가 시사하듯이 실천성을 고려한 원칙과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최소강령전략이 대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및 인권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비판(비판적 민족공조),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비판(긴장된 한미공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적극적 노력에 대한 요구(조직된 국제협력)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차원의 국제연대(소위 초국가적 외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협력(소

9) 한반도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을 세계적 차원의 평화운동과 연결시켜 바라보려는 노력으로는 김승국,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 이라크전쟁 반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전망 2003 여름 참조.

10) 이미 이라크전쟁에서 경험했듯이 북·미 갈등도 일종의 정보전, 왜곡된 정보의 유포·통제와 정보해석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대중에 대한 캠페인은 정보전의 한 형태이다.

위 1.5 외교), 시민사회의 정부 정책 비판(소위 양면게임 논리의 활용)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 평화운동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어떻게 평화운동을 위한 한국 사회 나름의 담론을 만들 것인가? 특히 한국 사회가 여전히 냉전질서에 구속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담론을 형성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  
추진요령/구체. 정책성향/제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2) 어떻게 위기상황의 반전운동에서 일상적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일상적 평화운동이 위기상황의 반전평화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과연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편적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민족주의, 통일운동 등과 평화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sup>11)</sup>

4) 어떻게 20세기 한국 사회와 인류문명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할 것인가?

중·동아시아 평화연대

중·장기적으로 세 영역에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sup>12)</sup>

1)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한 정책비판 및 대안제시: 현 단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한핵문제에 의한 북·미 갈등과 한반도 위기이다.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국들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패권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평화 정착과 협력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연대를 추구한다.

탈패권적 평화

11) "통일담론에 대한 경계와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통일담론조차 자기재생산의 기제에 편입시키는 분단체제의 복합성과 유연성을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지, 통일담론을 포기함으로써 평화정착이 가능하리라 보는 것은 또 하나의 단순화요 독일과 한반도 현실의 차이를 간과한 공담에 불과하다. 한반도에서 평화담론만으로 평화정착이 불가능한 것은 6·25 전에 남북 모두가 북진통일과 남진해방을 공공연하게 다짐할 만큼 한반도의 분단이 아무런 명분 없이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통일 없는 평화를 주장하는 일은 곧 이 타율적 분단을 추인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였으며, 지금도 분단체제의 질곡을 수용하면서 그 소수 기득권층으로 남으려 한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다. 한반도는 독일과 달리 통일담론과 평화담론을 결합하면서 분단체제 극복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절호의 공부자리이기도 하다." 백낙청, "한반도에 '일류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작과비평 2002 겨울, 19~20쪽.

12) 세 영역의 활동계획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향하는 운동방향이다.

2) 국방감시, 및 군개혁: 평화군축운동은 궁극적으로 군축 실현과 탈안보화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목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을 고려하여, 당분간 성역화되어 온 국방·안보영역에 대한 시민감시를 확대하고 군비확장·군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력한다. 국방분야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백서에 대응하는 시민평화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한다.

3) 시민교육과 평화연대: 평화리더십의 기초가 될 평화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한다. 이론개발과 시민교육은 분리될 수 없는 활동이다. 연구모임 활동과 시민교육 체계화를 점진적이지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일꾼 형성과 시민의 평화심성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을 위한 교재개발도 주요 활동영역의 하나이다.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연대활동이 두드러진 분야이다. 국내·외 평화운동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반전평화국제연대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 2.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한 제안

### 가. 동아시아에 대하여 - 탈패권의 딜레마<sup>13)</sup>

한 지역의 국가들간에 협력체가 이루어져 있을 때, 지역내 국가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익과 희생을 커다란 갈등 없이 구성원들간에 분배하기 위한 원칙을 결정해둘 수 있다. 당연히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국가간의 이상사회도 구상해볼 만하다. 반면 어떤 지역이 하나의 패권 아래에 놓여 있다면, 지역질서는 패권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패권국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익과 희생을 배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단일패권이 아닌 경우, 패권에 기초한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원리는 다소 복잡하다. 냉전체제라는 패권국을 최상위에 둔 지배질서 간의 대립에서는 이익과 희생의 배분이 패권의 확장이라는 요소와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단순

13) 박순성, "분단체제의 미래와 동북아질서," 창작과비평 27권 1호(1999 봄)에서 가져와 수정하였음.

하게 말한다면, 경제성(효율성)의 논리와 지배(패권)의 논리가 상호 작용하면서 냉전질서를 유지시켜 나갔다. 물론 경제성의 논리가 경제영역의 작동원리를, 지배의 논리가 정치군사영역의 작동원리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근대세계에서는 패권질서 밑에서 경제영역의 작동원리, 자본주의세계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패권질서를 근본에서 흔들기조차 한다.

냉전체제 이후 미국을 단일패권국가로 하는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있다. 미국이 전 영역에 걸쳐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미국의 패권질서에서 패권의 논리와 경제성의 논리가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당연히 동아시아의 질서는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 간다.

그러나 단일패권이라도 완전한 지배를 의미할 수는 없다. 특히 20세기 말의 지구공간정치에서 단일패권은 두 측면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첫째, 패권과 패권정치는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의 시대인 현재, 패권국은 국내여론과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흔히 인정되는 칸트식 자유주의 명제는 국내의 민주주의가 패권국의 정책에 제한을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패권국은 자신의 국제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록 종종 형식상의 절차로만 존재하는 경우 일지라도 국제기구에서 국가간 합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권국은 국제기구를 장악하여 패권확장을 위한 정치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인간 생활의 기본 영역인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속화시대의 군사력과 경제제도는 패권국의 영향력이 공간의 거리에 더 이상 반비례하지 않도록 만들었지만, 지역의 벽은 문화와 제도의 차원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세계화는 지역주의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를 이념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봉쇄하려는 노력이 바로 세계화의 논리, 시장근본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단일패권은 현재 지역의 제약에 노출되어 있다. 지역의 제약은 곧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한 지역의 거부이다. 그런데 다가올 21세기 지구공간정치와 자본주의세계경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단일패권과 지역거부 사이의 긴장은 '패권에 대한 도전과 방어'라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탈패권의 딜레마'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중국 중심의 질서와 일본 중심의 질서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 요약되는 탈패권의 길은 모두

현재의 패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보장할 바람직한 질서로는 평가받을 수 없다. 결국 동아시아는 패권을 거부하지만 탈패권의 대안들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 탈패권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논의의 간결성과 이해의 명료성을 위해 타이완과 러시아를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검토해보면, 만주를 포함한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세 국가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지구공간정치라는 관점에서 수세기 전부터,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문화, 정치, 군사, 경제 전 영역에서 느슨하지만 경계선을 가진 하나의 단위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당연히 갈등과 적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가까이는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동아시아지역이 갖고 있는 탄성이나 점성은 냉전체제와 세계자본주의의 압력을 이겨내었다. 체제와 경제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유사성이나 친화력은 흔히 가치니 전통이니 하는 개념으로 모아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데 있다. 하나의 경계선을 가진 지역단위로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세 국가가 21세기 지구공간정치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출발점'이자 '세력기반'으로 삼아야 할 '꼭 차 있는 장(場)'이다.<sup>14)</sup>

중국 중심의 길은 미국의 패권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이 탈패권의 핵심세력이 되는 경로이다. 중국은 내부에서 증대하고 있는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의 기치 아래 군사·경제 양 부문에서 거대한 힘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성장속도, 경쟁력, 규모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내에 세계 제2의 강국이 되리라는 예측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영향력은 강대한 군사력으로부터 나온다. 미래의 중국이 갖게 될 경제력은 경제발전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중국이 주축이 되는 탈패권질서는 중국의 패권질서로 갈 가능성조차 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 특히 동아시아경제권에서 교역, 경쟁력, 원조, 해외투자 모든 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경제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단일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본중심의 길을 생각하도록

14) 지구의 공간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 패권국가 미국은 외부자이면서 동시에 내부자이다.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은 잠재되어 있는 군사력으로 평가되면서, 패권국가 일본의 가능성이 논의된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동아시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화의 가능성을 지닌 경제력에 바탕을 둔 일본 중심의 길 역시 탈패권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미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질서와 중국 또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질서는 간단히 '태평양시대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인의 동아시아'라는 용어로 대비시켜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이든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질서상태로 조정해 내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단일패권국가인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 중국과 일본이 각각 나름대로 내세우는 '동아시아인의 협력'이 대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이든 동아시아인의 협력이든, 동아시아지역의 세 강대국간에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간체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거주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욱이 패권과 탈패권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탈패권의 딜레마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지구공간정치의 하부원리인 세계자본주의의 작동원리와 결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은 동아시아지역내 패권-탈패권의 긴장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나. 평화연대에 대하여 - 제약요인을 넘어

동아시아지역에서 패권-탈패권의 긴장은 시민사회 차원의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요구한다. 국가주도의 패권경쟁과 탈패권전략은 협력보다는 긴장을, 군축보다는 군비경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지역국가들 사이의 독자적인 협력체제를 견제하고 21세기 전반기 동안 패권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MD계획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 미·한 군사동맹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단일패권질서의 유지·강화는 지역의 안정성을 표면적으로는 높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화시킨다. 북·미 갈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적 세계질서의 유지·강화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군사적 긴장의 예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강국화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 강화라는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sup>15)</sup> 동아시아 평화연대는 이러한 경향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 단계 동아시아 평화연대는 북·미 갈등의 해결과 군비경쟁의 종식을 일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 북·미 갈등과 군비경쟁이 일차적으로 국가안보논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평화연대의 출발은 시민사회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평화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현 단계에서 쉽게 평화연대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아직 각 국가들에서 평화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니 평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고조되어 있지 못하다. 더욱이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은 '동아시아인의 연대'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기 힘들게 한다. 한·중·일 삼국의 경제력 격차, 정치체제의 불일치, 시민사회 성숙도의 차이 등에 덧붙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비극의 동아시아 역사가 존재한다. 역사에 대한 이해, 현재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 모두에서 동아시아 시민사회는 연대를 위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지 않다. 동아시아 평화연대는 아직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에서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지 못하였다.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평화연대에 대한 소극적인 조건, 또는 제약요인은 역설적으로 평화연대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관심을 촉구한다. 패권-탈패권의 긴장이 유지되는 속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면, 동아시아 21세기는 19세기 말부터 계속된 분열과 전쟁의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제약요인은 평화연대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동아시아 평화연대는 차이와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연대는 국가보다는 시민사회가, 정체성의 강제나 과거사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는 이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민사회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sup>16)</sup> 이런 관점에서 20세기에 두 차례의 전쟁을 겪었던 유럽

15) 한국의 자주국방논리에 기초한 국방비 증액도 이러한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남한 시민사회는 자주국방과 국방비 증액의 논리가 갖고 있는 허구성을 밝혀내고, 국방비 증액을 막아야 한다.

16) 동아시아 정체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적 두 가지를 여기에 인용해 두자. “ 주목할만한 것은, 문화·종족 및 종교의 차이는 동남아 국가가 지역연합을 형성하는 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동아시아 국가가 이른바 ‘유교문화권’에 함께 속하고 경제에 있어 서로 의존하면서도 오히려 시종 일종을 이와 유사한 연계들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현상 자체는 단지 냉전과 그 연속적 관계 속에서 답안을 찾을 수 있을

의 통합 경험은 동아시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 다. 현 단계의 핵심 사안과 몇 가지 제안

동아시아 평화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동아시아의 냉전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체제 속의 체제’이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은 동아시아 평화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분단은 동아시아 냉전의 산물이다. 동아시아 냉전을 종식시키는 지역협력이 가능할 때,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조건이 마련된다. 이런 점에서, 이미 앞서서도 말했지만, 북·미 갈등은 한반도 냉전질서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표현이다. 북·미 갈등의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의 첫 번째 과제이자,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한 첫 번째 시험장이다.

현재 북·미 갈등의 전개는 일종의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2년 10월 시작된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은 탐색의 단계를 마치고, 조만간 협상과 대결을 결정할 1차 정책결정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시민사회는 세 가지 요구를 하나로 묶어내어야 한다. 첫째, 북·미 갈등은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한민족 생존권의 문제).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험 억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일본, 미국의 주된 관심).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북한에게 주어져야 한다(중국의 외교적 목표). 이러한 세 가지 요구를 하나로 묶어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연대와 함께 정치사회 차원의 국제연대도,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동시적 국제연대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연대에 기초해서 공동 캠페인의 추진도 고려할 만하다.

북미 생존권  
vs  
93년 핵  
압박 정책

뿐이다.” 왕후이, “신아시아 상상의 역사적 조건 1,” 황해문화 2002 가을, 160쪽. “지역적 공동체들을 창조하는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검사를 거쳐야 한다. 즉 우리 자신에게 순수한 국가적 정체성이란 없다는 것, 즉 순수한 한국적 정체성도 순수한 중국적 정체성, 러시아 또는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내가 ‘혼성적 정체성’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사카모토 요시카즈, “동북아의 지성적 공동체 구축 - 문체와 전망들,” 황해문화 2002 봄, 264쪽.



※ 단기적으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사회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시민법정 개최, 정책대안 제시, 정보공개 요청 등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해 세 가지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7)</sup>

구상 1: 동아시아 사회포럼 동아시아 공동의 집 조직·운영

- 목적: 동아시아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사회포럼을 조직하여 운영
- 구성
  - '전망과 대안' 모임, 소위 '비전그룹' 회의(cf. 동북아지식인연대회의)
  - '동향과 정책' 회의, 정보의 왜곡과 해석의 독점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

시합

- 평화일꾼 회의, 개별 국가 차원의 그리고 국제연대 차원의 평화운동 보고와 모색<sup>18)</sup>

- 중장기 전망: 포럼에서 네트워크로, 시민사회 차원의 동아시아 Think-Tank 로

구상 2: 동아시아 도시의 연대, 지역의 연대<sup>19)</sup>

- 목적: 동아시아 도시간 연대 또는 지역간 연대를 추구, 국가 차원의 경제적·정치적 차이가 매우 큰 상태에서 점진적인 평화연대의 방안임
- 예를 들면, 인천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인천-상해-요코하마 3 도시 도시발전 전략 및 협력방안 국제심포지움(2002. 10. 31)에서 제기된 것처럼, 도시간 연대 또는 시민들간의 연대는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한 주요한 기반이 될 것임

17) 이에 앞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국제연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18) 최근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활동. 예를 들면 일본 청년시민단체들이 주최 이 된 Peace Now Korea/Japan 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Peace Boat 는 동아시아 청년평화일꾼의 양성과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평화심성 형성을 위해 참조할 만한 좋은 예이다.

19) 이현식, "심포지움 지상중계 - 인천·상하이·요코하마의 도시간 연대를 위하여," 황해 문화 2002 겨울 참조.

이들 3개 도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향후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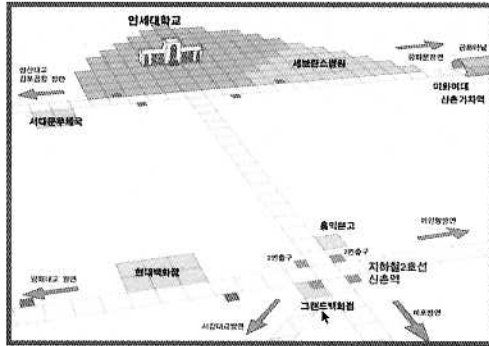
천쓰허 교수는 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적 측면의 협력을 강조하였고, 최원식 교수는 시민 사회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283쪽

구상 3: 반핵·군축운동 공동프로그램 개발

- 동아시아는 피폭의 경험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의 하나이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한다면, 세계국방비의 거의 3/4에 육박한다.
- 일본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활동력이 뛰어난 반핵운동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모색한다.

참고: 사카모토 요시카즈 교수의 동북아 지성적 공동체 구축 방안 ( 황해문화 2002 봄)

통합된 동북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시키려면, 최소한 지성적으로라도 다음의 네 가지 점에 관해서 전통적인 주권국가 체계를 초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우리는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이 지역의 부정적인 역사의 유산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이 자신의 역사적 잘못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한다면 그들의 일본과 일본의 불충분한 사과에 대한 불신, 거침없음은 완화될 것이다. 이 문제는 명백히 지역적 협력의 증진에 대한 주요한 장애물들이다. 둘째로,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드시 국가 경계선을 따라 구획 설정된 현 국제정치 구조의 주권국가 체계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로, 정부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들 사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은 북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지역 지식인 공동체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최근까지 충성심과 사회적인 소속 체계의 중심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에 우위를 둬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인받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지역화의 시대에 주권국가라는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국가의 우월성은 변경되어야 한다. 하나는 국가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세계 혹은 지역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이나 유럽연합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또 다른 방식은 초국가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하층부로부터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초국가적인 다수의 비정부조직NGO들의 창설이 이러한 경우이다.



**연락처**

한국사회포럼사무국  
 전국교수노동조합 02-871-8706  
 임상선 차장 : 016-9202-4436  
 송주명 교수 : 018-362-3999

**한반도 평화포럼**

**“정전 50년,  
 한반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 일시 : 2003년 7월 26일(토) / 오전 9시30분-오후 6시40분
-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관 대강당, 법과대학 B-102·106
- 주최 : 정전 50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사회포럼
- 후원 :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7.27 한반도 평화대회**  
**‘정전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로 나아가자’**  
**‘정전50년! 한반도를 동아시아평화의 등대로!’**

- 일시: 7월 27일 (일) 2시
- 장소: 임진각
- 주최: 정전50년평화대회조직위원회
- 연락처: 011-594-7665  
 (조직위원회 김성란 국장)
- 철도: 12시20분, 서울역
- 대절버스: 12시, 여의도둔치 금성무대
- 승용차: 12시, 여의도둔치 금성무대
- 자전거: 일산출발



# 프로그램

한반도 평화포럼

## “정전 50년, 한반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개회식 // 오전 9시30분-10시

- 민중의례
- 경과보고 : 송주명(한신대, 한국사회포럼 사무국장)
- 개회사 : 조희연(한국사회포럼, 조직위 상임운영위원장)
- 인사말 : 단병호(민주노총, 조직위 공동대표)
- 인사말 : 박상중(참여연대, 조직위고문)
- 기조연설 :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제1세션, 오전 10시-12시<sup>30분</sup>

정전체제의 문제와 '북핵위기': 한반도 위기의 진보적 해결책과 평화체제

- 사회 : 황상익(서울대, 교수노조)
- 발제
  - 브루스 커밍스(시카고대) "한반도 정전체제의 역사와 문제점"
  - 이토 나리히코(일본주오대학, 아소시에21) "한국정전체제의 평화적 극복"
  - 김민웅(재미언론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위기, 그 진보적 해법"
- 토론
  - 손호철(서강대, 민교협)
  - 김승국(통일연대)
  - 이종희(노동자의 힘)
  - 박석운(민중연대)
  - 김제남(녹색연합)

점심식사 12시30분-1시30분

제2세션(주제토론) 오후 1시30분-3시<sup>30분</sup>

한반도 위기, 평화운동은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주제 I <sup>105호</sup>
- 이라크 전쟁이후 반전·반세계화운동
- 사회 : 김어진(아시아사회연대)
  - 발제
    - 최일봉(다함께) "반전운동의 평가와 전망"
    - 고민택(노동자의 힘) "현 시기 반제, 반미, 반전의 성격과 투쟁 방향"
    - 김승호(사이버노동대학) "노동자는 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가"
  - 플로어토론

주제 II <sup>107호</sup>

- 한반도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 사회 : 신정완(성공회대, 학단협)
  - 발제
    - 정대연(민중연대)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쟁점과 과제"
    - 양관수(희망네트워크 공동의장,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쟁점과 과제"
  - 플로어토론

주제 III <sup>102호</sup>

- 남한 평화운동과 동아시아 평화연대
- 사회 : 정옥식(평화네트워크)
  - 발제
    - 정경관(평화여성회) "한반도 평화운동과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비전"
    - 키타가와 히로카즈(일한민중연대) "일본의 보수군사대국화와 동아시아 평화운동"
  - 플로어토론

휴식

제3세션(종합토론), 오후 3시<sup>30분</sup>-6시

한반도 위기와 남한 및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과제

- 사회 : 김상곤(한신대)
- 발제
  - 강정구(동국대, 통일연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
  - 박순성(동국대, 참여연대) "한국 평화군축운동의 발전방향과 동아시아 평화연대"
- 주제토론 보고 : 주제토론사회자
- 원탁토론
  - 이창희(평화통일시민연대)
  - 이희수(민주노총)
  - 변연식(국제민주연대)
  - 서주환(환경연합)
  - 장상환(경상대, 민주노동당)
  - 박하순(사회진보연대)

휴식

평화선언 채택, 오후 6시10분-6시40분

- 사회 : 조희연(성공회대, 상임운영위원장)

폐회 // 오후 6시40분

## 초대의 글

올 7월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멈춘 지 50년이 됩니다. '종전'이 아닌 '정전' 5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평시체제가 아니라 잠재적 전쟁체제 하에서 반세기를 살아왔다는 사실에 새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나라 안팎에서 다음 선제공격의 대상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짐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정전 반세기'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한반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그리하여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역사적 사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간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오히려 대북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대북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사법제 제정에 이어 평화헌법의 수정움직임 등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경향 또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패권강화에 비례하여 미중유의 반제·반전 평화운동이 전세계의 새로운 평화민주연대를 향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이라크 전쟁참화를 전후하여, 그리고 미군들에 의한 여중생들의 몰인정한 죽음에 직면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물결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27일 이래 장장 반세기에 걸친 정전체제에 짓눌려온 한반도에서 반전·평화의 과제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과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정전 50년의 왜곡된 사회상과 가중되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아시아평화의 초석을 굳건히 하는 일이야말로 절박하기 그지없는 과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동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세워내고 반전평화의 국제연대를 더욱 굳건한 것으로 해가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한국사회포럼과 정전 50년평화대회조직위원회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을 한자리에 모셔, "한반도 평화포럼: 정전 50년, 한반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포럼은 정전 5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참된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사회포럼의 첫 '주제포럼' (thematic forum)으로서 한반도 반전 평화운동의 비전과 국제적 평화연대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운 여름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확산시켜가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6일

정전50년평화대회조직위원회, 한국사회포럼사무국